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 독일의 자본·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

김 세 균

1993년부터 시행되는 서유럽의 시장통합은 유럽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낙관론이 주류가 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프랑스 혁명 이후 보편화된 민족국가가 유럽대륙을 단위로 하는 광역국가로 재편되는 정치통합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통합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는 비주류의 다수는 노자의 협조와 사회적 동반자 관계의 성립, 신보수주의의 극복과 진보세력의 해제모니 확립을 시도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합과 소련 동구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는 유럽 내부에 존재하는 저임금 저발전 지역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는 새로운 구조적 갈등이 표출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유럽의 통합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주권행사의 범위를 둘러싼 「민족국가적 심급」과 「초민족국가적 심급」의 관계, 정치통합과 경제통합의 관계, 유럽내부의 중심과 주변의 관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I. 서 론

1993년부터 시행되는 서유럽 차원에서의 시장 단일화는 분명 해당 국가와 지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일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단지 일국적 규모에서의 경제행위 및 경제생활의 내용과 형태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자체가 세계적 차원에서 얹혀 있고 일정한 의미에서 상호 '의존' 내지 상호 '종속'되어 있는 현대 세계시장의 운동방식과 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될 수 있다. 시장 단일화 추진과 더불어 흔히 더 이상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된 것으로 진단되어 온 '구' 대륙 유럽이 80년대에 한 때 운위되던 소위 '태평양 시대'론을 무색케 하면서 90년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더우기 만일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통합 과정이 장기적으로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나아가는 하나의 경과점이라면, 이 과정은 단지 경제적 문제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그러한 과정의 진척과 더불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전파·확산되기 시작한 하나의 특정한 역사적 국가형태 내지 '프랑스-유럽형'의 '민족국가', 즉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민'이 하나의 정체(body politic)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동요하고 있다. 근대 이후 세계 정치사를 근본적으로 규정해 온 '민족국가' 형태가 유럽이라는 대륙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거대한 '광역국가'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통합 과정을 바라보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은 이미 1957년에 서명된 〈유럽경제 공동체(EWG)〉 조약 제1부 제2조 '공동체의 제 과제'라는 항목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공동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동시장의 설립과 회원국 간의 점진적인 경제정책의 접근을 통하여, 공동체내 경제생활의 조화로운 발전, 항상적이고 정선된 경제 확대, 더욱 중대된 안정성, 생활유지 수준의 고양 및 공동체에 소속된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의 촉진이 그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접근은 또한 특히 최근에 들어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EG-Kommission)의 위촉을 받아 이태리의 체치니가 집필한 이른바 <체치니 보고서>¹의 기본개념, 한마디로 시장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형성은 새로운 경제성장, 고용촉진 등등의 ‘통합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적 견해에 반대하는 정치(혹은 사회) 세력의 견해 역시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 이들의 견해는 ‘다수 입장’과 ‘소수 입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² 먼저 이 가운데 ‘소수 입장’은 시장통합이 갖는 자본주의적 혹은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원칙적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전략적 대안은 시장통합에 대한 투쟁과 민족적 주권의 방어를 요구하는 데로 나아간다. ‘다수 입장’에 서있는 노조와 정당 혹은 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유럽통합 과정을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간주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유럽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 입장에는 통합과정이 갖고 있는 노자 간의 ‘대화’와 합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자 간의 이해균형을 요구하는 노사협조주의 혹은 사회동반자주의 분파와, 다른 한편으로 이 과정에 내재한 모순과 갈등의 잠재력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면서 현재 유럽통합 과정 속에 관철되고 있는 신보수주의적 해제모니를 ‘사회적 유럽’을 위한 진보세력의 해제모니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파가 있다.

이 글은 독일을 중심으로한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적 제 요소와 구체적 조건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된 문제들을 주로 노자관계를 축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 글의 Ⅱ장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유럽통합 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단히 일별하는 것을 통해 그것의 현 단계와 수준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이 과정의 핵심인 시장통합의 배경, 성격과 그 ‘효과’를 특히 89-90년 연간에 일어난 세계사적 대격변 과정, 즉 이른바 소련·동구의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양독의 흡수통합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 글의 본론을 이를 Ⅳ장에서는 시장통합 프로젝트의 구조와 조건을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차원과 유럽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현재의 유럽통합이 안고 있는 문제의 전개 방향을 전망해 보려고 한다.

1 이 보고서는 독역판인 Paolo Cecchini, *Europa '92 - Der Vorteile des Binnenmarktes*, Baden-Baden 1988 참조.

2 자세한 것은 F.Deppe, “Die westeuropäische Arbeiterbewegung und die EG”, *Zeitschrift Marxistische Erneuerung*(이하 Z), März 1990, P. 150 ff. 참조.

II. 유럽공동체 통합과정의 역사적 개관(1945년-1989년)

2차대전 이후의 유럽통합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몇개의 국면 혹은 단계를 경과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유럽공동체의 형성 국면(45년-57년).

둘째, <유럽경제 공동체(EWG)>의 결성과 상대적 안정화 국면(57년-70년).

셋째, 유럽공동체의 위기와 정체 국면(70년-84년).

넷째, 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 국면(85년-92년).

이러한 각 국면들은 각각에 대응하는 국제정치적 역관계와 세계시장의 조건, 그리고 대내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지금부터는 유럽공동체 통합 역사가 지난 제 측면들을 살펴 보자.

1. 유럽공동체의 형성국면(45년-57년)

이 시기 유럽의 당면한 직접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2차대전 과정을 통해 폐폐된 국가의 기간시설을 복구·재건하는데 있었다. 여기서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 유럽을 통합시키기 위한 경제적 지렛대였던 미국의 ‘마샬플랜’은 유럽경제의 재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원조’였다. 유럽이 재부흥되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원인이 다양한 형태로 왜곡된 민족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고와, 이러한 국가 간의 무한 경쟁을 유발한 민족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은 유럽통합의 유력한 이념적 혹은 사회심리적 기초가 된다. 한편 47년-48년 연합국에 의한 1차 베를린 봉쇄로 격발된 국제냉전은 이 시기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국제정치적 조건이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이른바 미·소 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압도적 협제모니의 틈새에서 유럽이 ‘한조각의’ 영향이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기왕의 역내 국가관계의 모순을 가능한 한 통합하고, 또 상호 협력의 실마리를 준비하는 것외에 별다른 것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 나아가 일반적인 국제냉전의 격화라는 조건하에서 당시 서유럽 전체에 대해 점령국 내지 승전국으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미국에게는 이를 서유럽 국가군을 확고한 반소, 반공볼록 속에 편입시켜 하나의 동맹 내지 조약체계를 통해 결박지울 군사적·정치적 요구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었다. 여기서 특히 국제냉전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은 이러한 미국에 의한 서유럽의 반소 군사볼록화라는 전략적 구도에 대단히 유용한 심리적·정치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³

다른 한편 이미 일반관세 무역협정(GATT)과 브레튼 우즈협정 등을 통해 달라를 세계경제의 기축통화로 하면서 세계경제를 명실상부하게 주도하고 있던 미국은 마샬플랜

³ 이 시기 미국의 대독일정책에 대해서는 K. J. Brandstetter, *Allianz des Misstrauens*, Köln 1989, P. 21 ff. 참조.

을 통해 전후 유럽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하부체계로 포섭함과 동시에 유럽자본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당시 미국은 마샬플랜에 의한 광범위한 미국의 상품, 화폐자본의 유럽수출을 통해 한편으로는 미국내 자본의 과잉축적을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원조’를 통해 서유럽의 전후 질서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복원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당시 미국의 의도는 유럽자본의 이해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 말은 국별 자본 간의 경쟁이 소멸되고 이들의 이해가 일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든 미국 주도 하의 서유럽 경제통합은 자본주의국가 간의 경쟁을 ‘규제’하고 이들 국별 자본 간의 경쟁의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⁴ 아울러 이 시기에는 향후 오랜 기간 동안의 유럽통합의 기본틀과 독특한 갈등구조가 형성된다. 즉 영국을 제외한 ‘소유럽적’ 통합, 독·불 간의 경쟁적 대립 그리고 서독의 자본주의진영 통합을 통한 ‘독일문제’의 ‘해결’이라는 정식이 그것이다.⁵

49년에 창설된 <유럽협의회(Europarat)>는 이시기 유럽통합의 시발점을 이룬다.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한 이 <협의회>는 그러나 그 상징적인 효과와 53년에 발효된 “인권과 기본자유를 위한 유럽협약”을 통과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었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49년에 창설된 나토(NATO)와 프랑스의회가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좌절된 유럽방위공동체(EVG)안에 이어 서독 재무장의 기초를 제공한 <서유럽동맹(Westeuropäische Union)>이 중요하다. 경제분야에서는 현재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유럽경제 협력기구(OEEC)>가 48년에 구성되었으며, 51년에는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의 주창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GKS =Europäische Gemeinschaft fur Kohle und Stahl)>—이른바 <광업연맹(Montanunion)>—가 결성되었다.

<광업연맹>의 창설은 유럽통합사와 독·불관계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먼저 군사적으로 석탄과 철강이 유럽의 통상전에 있어서 일국의 전쟁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당시까지 중공업의 핵심분야라는 점에서 광업분야를 국제적 규제의 틀 하에 둔다는 것 자체는 장래 해당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슈망안(案)>의 제안자가 언급한 것처럼 “불·독 간의 모든 전쟁은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불가능” 할 수도 있는 것이다.⁶ 둘째, 그러나 실제로 당시 프랑스가 서독에 비해 여전히 열세에 있었던 자국의 산업생산력을 가지고 양국 간의 격차를 추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할 때, 프랑스는 자신의 경제적 약점을 정치적 영향을 통해 보전하려고 한 반면 서독은 당시 미·영·불 점령국의

4 A. Statz, “Zur Geschichte der westeuropäischen Integration bis zur Gründung der EWG”, F. Deppe (ED.),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EWG)*, Reinbek bei Hamburg 1975, p.118.

5 Ibid., P. 122-23.

6 원문은 U.Sahm (ed.), *Der Schuman-Plan. Vertrag über die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für Kohle und Stahl (Textausgabe)*, Frankfurt/M. 1951, P. 17-20에 수록되어 있음.

규약에 의해 주권이 제약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광업연맹>의 창설을 통해 프랑스와 정치·경제적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로써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적 자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타산에서 이 안을 즉각 수용하였다.셋째, <광업연맹>은 가입국의 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초국적(überstaatlich)' 기구, 예를 들어 <고등관할청(Hohe Behörde)> 등을 갖추고 있었다.

2. <유럽경제 공동체>의 결성과 상대적 안정화국면(57년-70년)

57년 3월의 '로마조약' 체결은 유럽통합사의 획기적 전환점이라 할만하다. 이 조약에 근거해 <유럽경제 공동체>가 창설되고 나아가 <광업연맹>을 모델로 하는, 즉 초국가적 제도를 갖춘 부문별 통합의 일환으로 <유럽 원자력 공동체(EAG, Euratom)>가 창설된다. <유럽경제 공동체>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다단계로 실시되어 60년대 말에 사실상 완료된 <관세동맹>과, 2.— 그 당시로서는 무위에 그치고 만— 관세장벽을 넘어선 재화, 용역,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교류를 목표로 하는 <공동시장>을 구축하고, 3.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생산물에 대한 공동의 정책과 시장을 창출하며, 4. 이를 위해 공동의 정치적 제도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현재에도 유효한 유럽공동체의 정치적 메카니즘의 골격이 형성된다. 즉 '무권력의 내각'으로서 유럽공동체의 '집행부' 기능을 담당하는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회원국 정상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Ministerrat)>, <유럽의회>, <유럽법정> 등이 이 당시에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유럽경제공동체>가 실행에 옮겨진 58년 1월 1일부터 69년 12월 헤이그 정상회담에까지 이르는 이 시기의 국제정치적 틀과 발전경향은 이른바 '탈냉전'과 데滂트에 의해 각인되어 있었다. 이것은 또한 2차대전 이후 생성된 소련·동구의 사회주의권이 초기의 부침을 일정하게 나마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된 '사회주의 건설'로 접어 들게 되는 것과도 일치한다. 뿐만아니라 65년-66년 연간의 전후 최초의 경제위기가 도래되면서 자본주의경제가 일정한 경기주기를 보이기까지 서유럽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이른바 고도성장과 나아가 완전고용까지를 구가하는 급속한 성장과 축적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에 힘입어 이른바 서구형의 '복지국가'가 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유럽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미국자본과 유럽자본간의 모순과 갈등을 그 내부에 안고 있는 것 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면서 이시기 서유럽 통합과정은 최대의 성공을 기록한 국면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통합의 진전으로는 68년 이후에 관세동맹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유럽차원에서의 대외 무역정책 및 공동의 농업시장 등이 실현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규제'가 가능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과정을 기본적으로 규정짓고 있는 내적 한계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먼저 <유럽경제 공동체>의 결성 당시의 환상, 즉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근거하는 이른바 '넘쳐나기(spill-over)'

론적인 — 부문적 통합이 전체적 통합으로, 경제의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자동적으로’ 넘쳐 흐르리라는 통합유인 효과에 대한 — 기대와는 전혀 달리 경제영역에서의 통합정도의 가속화가 정치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양자 간의 간격이 오히려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유럽 차원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불균형 발전은 동시에 한편으로 회원국 간의 공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조건 및 이해의 차이, 회원국간의 경제적 불균형 및 각국 정부가 자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등에서 유래하는 각국 유럽정책의 ‘민족국가적 성격’과, 다른 한편으로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국제화와 이와 맞물려 있는 경제생활의 국제화가 요구하는 ‘초민족국가적 성격’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특히 서독과 프랑스 간의 입장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프랑스는 당시까지 서독을 끌어 들여 영국을 견제하고 미국에 대해 자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구도를 갖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 ‘드골주의’), 자국경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구조적 약점, 즉 인플레,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화 정도와 자본의 집중도 등으로 인해 서독에 대한 자국의 입장 관철에서 번번히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미국의 반소동맹체계에 확고히 편입되어 있었고, 기본적으로 중공업 위주의 투자재에 주력하면서 수출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서독으로서는 무역자유화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서독의 유럽공동체 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구조는 예를 들면 65년 <각료회의>의 결의방식을 전원 합의제에서 다수결로 전환하자는 안에 대해 프랑스가 비토권을 행사하고 ‘결석 정책’을 취한 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유럽공동체의 위기와 정체국면(70년-84년)

70년대와 80년대 전반에 걸친 이시기의 국제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긴장완화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79년 이후 이란혁명을 기점으로 한 이른바 ‘신냉전’의 격화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러므로 유럽공동체 차원의 군사 및 안보정책이 전면에 부각되어 나타난다.⁷ 이와 함께 이시기 서유럽 경제는 무엇보다도 74-75년과 80-82년 두 차례에 걸친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침체와 위기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4년 브레튼 우즈협정 이후 25년 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를 구가해 오던 달라가 마침내 73년에 들어와 달라의 환율자유화로 인해 세계경제의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부터 세계통화체계에 일대 혼란이 야기된다.⁸ 이러한 위기과정은 상대적 안정국면 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유럽공동체 간의 불균등발전과 차이들을 전면에 부각시켰으며, 또 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러한 외적 조건의 열악화는 이미 만기가 되어 버린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자기정정 시도를 무위로 돌려 버리는 데 결정

⁷ 자세한 것은 L.Brock/ M. Jopp (eds.), *Sicherheitspolitische Zusammenarbeit und Kooperation der Rustungswirtschaft in Westeuropa*, Baden-Baden 1986 참조.

⁸ 세계통화위기에 대해서는 특히 E. Altvater, *Die Weltwährungskrise*, Frankfurt/M. 1973 참조.

적인 요인이 된다. 한 때의 ‘통합붐’ 보다는 개별국가 단위의 자구노력이 정책 순위의 우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유럽공동체의 확대·심화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도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유럽공동체의 외연의 확장을 들 수 있다. 60년대 전반에 걸쳐 갈등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영국의 가입문제가 73년을 기해 아일랜드, 스코트란드와 함께 영국이 국내의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유럽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럽공동체의 남방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81년에는 그리스가, 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유럽공동체는 명실상부하게 서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국제기구가 된 것이다.

그런데 70년대 유럽통합 논의의 중심은 경제 및 통화동맹의 문제였다. 특히 통합과정의 진행과 자본운동의 국제화에 따르는 유럽공동체 내 경제유착과 상호 의존도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통화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위기과정의 전개에 따른 통화 불안정은 이 과정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미 69년 헤이그 회담에서 제안되었던 ‘경제 및 통화동맹’은 이후 다단계의 시행안까지 마련되었지만 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해 좌절되어 버렸다. 이후 세계 통화체계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78년에 다시 이른바 ‘ECU (European Currency Unit)’를 결재단위로 하는 ‘유럽통화체계(EWS)’안이 제출되었지만 그 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독·불간의 입장차이는 명확한 것이었다. 프랑스정부가 경제정책의 조정보다는 통화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던 반면, 독일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각국 경제정책의 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통화주의자’(프랑스정부)와 ‘경제주의자’(서독정부) 간의 대립갈등은 특히 프랑스가 높은 인플레를 기록하고 있었던 반면 서독마르크화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자국의 구체적인 경제적 조건, 예컨대 경제성장을, 생산성, 자본관계 등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치분야에 있어서 공통의 외교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유럽 정치협력 기구 (Europäische Politische Zusammenarbeit)>가 69년 헤이그회담의 결의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79년에는 <유럽의회>의 직접선거가 처음 시행되었다.

70년대 전반과 8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유럽공동체의 위기와 정체는 결국 ‘자본주의적 통합과정의 구조와 내적 발전메카니즘’⁹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과정’으로 확대된 국가별 정책과 유럽공동체 정책 간의 긴장관계는 이후 국면에서의 유럽통화 과정을 경제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이전시키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고 있었다.¹⁰

그러면 이제부터는 유럽통합 과정의 현 국면과 이의 핵심적 프로젝트를 이루는 시장

9 H.-J. Axt/F. Deppe, *EuropaParlament und EG-Erweiterung. Krise oder Fortschritt der Integration?*, Köln 1978, P. 12.

10 K.P. Weiner, “Integrationsschub 1991. Dimension des Projekts westeuropäischer Binnenmarkt”,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이하 *Blätter*), 5/1988, P.532 참조.

통합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III. 유럽통합의 현 국면과 92년 시장통합

1. 92년 시장통합의 배경과 성격

57년 <유럽경제 공동체> 창설이후의 ‘제2세대 유럽’에서 이루어진 유럽통합사의 총괄적 결산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편으로 정치와 경제와의 불균형과, 다른 한편으로 유럽적 수준에서 민족국가와 유럽적 제도와의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 이른바 <유럽경제 공동체>의 ‘창설자’(Gründerväter)들의 ‘유럽 합중국’ 혹은 ‘유럽 연방국가’ 발상은 사실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70년대의 위기 국면 속에서 유럽공동체는 더 이상의 미래지향적 정치전망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정치학자 디터 쟁하스의 냉소적 표현처럼, “수년동안 논의되었고 이미 오래 전에 만기가 되어 버린 정정안들을 관철시키지 못한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연맹의 이상은 참상(Schreckbild)으로 변해 버렸다”.

그러나 85년 이후 수많은 정부협상과 제안 및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백서(白書)> 등을 통해 준비되어 온 <유럽통합 법령(Einheitliche Europäische Akte:EEA)>이 86년에 조인되고 87년까지 12개 회원국 의회에 의해 비준되어 그해 7월 1일 자로 시행되면서부터 이러한 상은 급변한다. ‘파산 직전’ 지경까지 내몰렸던 유럽공동체가实로 ‘혁명적으로’ 희망의 상징으로 재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85년의 <집행위원회> <백서>는 이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유럽은 기로에 서있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전진할 것인가, 혹은 중간으로 뒤 돌아가 버리고 말것인가. 우리는 유럽경제 통합의 완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부터 유래되는 정치적 소심함 때문에 유럽을 한갓 자유무역 지대로 전락해 버리도록 방치해 버릴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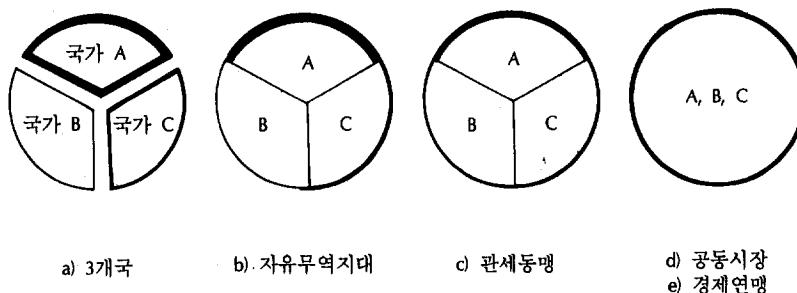
<통합유럽 법령>의 기본 개념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1. 정치적 통합목표의 강화: “유럽공동체창설조약에서 출발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 공동체내 관계들의 전체를 유럽 연맹(Union)으로 전환시킴으로써”(전문) “유럽 연맹으로 가는 경로사의 구체적인 진전들에 기여하는”(1조) 것이 유럽공동체의 목표이다.
2. 이미 57년의 로마조약에서부터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공동시장의 완성: 공동체는 역내 시장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을 92년 12월 31일까지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역내 시장은 경계가 없는 공간을 포괄한다. 이 내에서의 상품, 인력, 용역 그리고 자본의 자유 왕래는 이 조약의 해당규정에 의해 보장된다.”(유럽경제공동체 신조항 8조 a)

3. 연구·기술분야와 환경분야에 까지 공동체의 활동영역의 광역화.
4. <유럽정치 협력기구>에 조약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외교·안보분야에 까지 협력을 강화한다.
5. <각료회의>에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고 <유럽의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내 정책결정과정을 변화시킨다.

<유럽통합 법령>에 결의된 유럽공동체의 구조 및 목표변화 가운데 중핵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1992년까지 역내시장을 완수하겠다는 시장통합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유럽경제 통합과정은 다음의 4가지 단계로 모델화시켜 고찰할 수 있다.

(그림 1) 유럽경제통합의 4단계



위의 4가지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현단계 유럽의 시장통합은 c)를 지향하면서 d)단계의 완수를 과제로 하는 유럽통합 과정의 한 국면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통합의 구체적 내용은 90년 1월 1일에 채택된 이른바 '4가지 자유'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 자유'는 1) 생산품의 자유교류, 즉 회원국 간의 관세를 비롯한 일체의 장벽제거, 2) 회원국 간 인력의 자유로운 교류보장, 3) 회원국 간 기업의 자자(자) 설치와 용역이동의 자유, 4) 회원국 간 금융과 투자 등 자본이동의 자유보장을 말한다. 이를 위해 92년 말까지는 이러한 '4가지 자유'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비관세 무역장벽'이 철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물질적 장애 — 국경에서의 상품 및 개별 검사 —, 기술적 장애 —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상의 표준치 및 국가별로 판이한 법규법 —, 조세상의 장애 — 상이한 부가가치세율, 소비세율 등 —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이전까지는 단순히 '조화'로 표현되어 왔던 회원국 간의 경제정책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통합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에서나마 통화의 단일화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므로 시장통합 논의와 함께 <유럽통화 체계> 문제가 재론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제주의적' 입장에서 프랑스의 '통화주의적' 입장에 '제동자(Bremser)' 역할을 해 온 서독이 '선구자(Vorreiter)'의 입장으로 변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88년 서독의 외무상 겐셔는

〈유럽통화 체계〉와 〈유럽 중앙은행〉의 창출을 제안했다(이른바 〈겐셔의정서〉). 이러한 전전에는 유럽공동체 국가군들이 이전에는 ‘성장지향적’ 경제정책과 ‘안정지향적’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통일을 보기가 어려웠던 반면에 이미 80년대 중반이후부터 후자의 방향으로 그들 간에 상당한 경제정책의 접근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른바 〈겐셔의정서〉에는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즉 새로이 구성될 〈유럽 중앙은행〉은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안정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건에는 독·불·이 3국간의 전통적인 대립구도가 미묘한 양상으로 개입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대립구도가 한편으로는 ‘ECU’(불·이와 ‘약소국들’)와 다른 한편으로는 ‘DM’(독일) 간의 대립구도로 재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럽통화 체계〉의 구축에는 일정한 이해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것에 담겨야 될 내용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위해, 즉 구체적으로 말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계획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환율변동에 따르는 수출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통화관계의 안정성 담보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사실상 유럽공동체의 기축통화 내지 최소한 ‘유사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마르크화의 해계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새로이 구성될 유럽은행이 불·이 및 기타 국가들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일 필요가 있다. 반면 불·이의 입장에서는 달러 및 엔화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마르크화에 ‘ECU’를 대립시킴으로써 독일 마르크화를 전 유럽 차원에서 견제하겠다는 구도이다. 그러나 〈유럽통화 체계〉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공동체 회원국인 영국, 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이 자국의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의 손을 들어 주는 가운데, 97년-98년경에 가격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면서 유럽 단일통화 발행을 위한 〈유럽중앙은행〉을 97년-98년 경에 진립하는 안을 글자로 하는 〈경제·통화연맹〉의 창출이 현재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80년 대 후반에 들어 대단히 급작스럽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유럽통합논의와 그 귀결점으로서 92년 시장통합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85년까지 유럽에서 전개된 제반 정치·경제적 상황과 분리시켜 고찰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특히 80년-82년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과정을 전후하여 이른바 사회민주당 집권 하의 경제모델이었던 소위 ‘민족적 케인즈주의적’ 성장·축적 모델이 명확한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의 창출이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둘째, 70년대 후반 이후 ‘유럽공동체 위기’ 과정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이른바 ‘신보수주의 해계모니’의 공세는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사회민주주의적 정권을 대체하면서 개선행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집권과 함께 국내적 차원에서 자본층은 국가와의 관계를 재조정할 것과 또한 노조를 길들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왔던 제반 사회보장조치에 대한 과감한 삭제를 요구하였다.

셋째, 이른바 세계시장에서의 미·일·서유럽 이른바 ‘삼각(Triade)’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서유럽의 국제경쟁력 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특히 85년 중반

이후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체제경쟁의 무게중심을 무한 군비경쟁에서 경제적인 경쟁으로 이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였으며, 첨단산업의 육성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과 자본의 가치증식조건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특히 경제영역에 있어서 서유럽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및 성장을 둔화 현상, 다시 말해 70년대 이후부터 제기되어 온 ‘유럽 경화증(Eurosklerose)’ 문제는 85년 이후 유럽공동체의 구조재편을 위한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서유럽의 유럽공동체 회원국가와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한 상황은 새로운 성장 및 축적전략을 강요하는 ‘상황 압력(Sachzwang)’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측이 도출한 결론은 이른바 ‘세계시장지향적 자본주의 현대화’ 및 ‘탈규제 / 유연화(Deregulierung / Flexibilisierung)’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하에서 입안된 유럽공동체의 산업전략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장통합을 통해 유럽을 하나의 통일된 산업연관 속에 묶음으로써 유럽자본이 안정된 판매시장과 투자조건 및 미·일 자본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토록 한다.

둘째, 섬유, 의류, 피혁, 신발 및 철강, 조선등 이른바 ‘전통적’ 업종 내지 ‘사양산업(Krisenindustrie)’ 분야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축이나 업종전환 등을 통해 변화된 세계시장의 조건에 순응토록 유도한다.

셋째, 이른바 첨단미래산업, 예를 들어 컴퓨터, 신소재, 인체공학, 미시전자, 정보·통신, 우주·항공분야 등이 유럽의 미래를 주도하는 중심적—이른바 ‘기선(Flaggenschiff)’—업종으로 육성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기존의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 등에서 지배적 이었던 ‘기술 민족주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전 유럽적 차원에서의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기 위해 이미 83년이후 발주된 정보가공기술 분야에서의 유럽적 ‘연구·개발(F+E)’ 전략계획인 ‘ESPRIT 계획’을 92년 완수할 예정으로 있고, 이와 유사한 첨단 광통신 기술 분야의 ‘RACE 계획’ 역시 92년에 완수할 예정으로 가동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유럽공동체의 이러한 전략 구상에서 나타나는 시장통합의 근본적 경제개념은 한마디로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경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산업전략은 시장관계의 양적 확대에 기초한 세계시장 지향적 맥락에서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입안과정은 동시에 경제외적 계기, 즉 ‘구조조정자(Strukturlenker)’로서의 국가개입에 대한 찬·반 논쟁—특히 독일 논쟁—의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독일은 시장의 ‘자율성’에 국가가 감독자처럼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과 이른바 위에서 말한 ‘4가지 자유’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미시경제적인 ‘탈규제’ 개념이 과연 거시경제적인 경제정책의 결여와 호환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사실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정책 개념의 부재는 그러한 정책이 갖고 있는 최대의 결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경제학자 휙슈미트와 골트베은 유럽의 시장통합 과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 시장통합의 가속화 요소 가운데 ‘첫째 축’은 “시장 급진성의 전

유럽적 차원으로의 이전과 서유럽 자본주의 재편을 위한 …탈규제의 전유럽화”이며, ‘두 번째 축’은 “자본의 새로운 집적과 집중”이다. 따라서 시장통합 프로젝트는 “70년대의 자본주의 체제가 봉착했던 심각한 경제기능 위기에 대한 포괄적이며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답변의 한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전직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인 나리에스(Narjes)의 말처럼 ‘경제사 사상 최대의 탈규제’인 이러한 시장통합은 상이한 규범과 정책의 통일이라는 ‘적극적’ 통합이 아닌,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한 ‘소극적’ 통합에 달라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만일 시장메카니즘이 일체의 정치적 차원에서의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경제적 통합에 걸맞는 일정한 정치적 규제메카니즘을 구축하지 못한 채 자기동력과 이윤동기만으로 작동한다면, 현재의 통합과정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리라는 것은 매우 분명해진다.

2. 92년 시장통합의 ‘효과’와 영향

그렇다면 시장통합을 통해 기대되는 구체적인 소위 ‘이점’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체치니 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근대경제학적 분석기법을 동원한 다양한 관점과 통계들이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통합의 직접적 ‘효과’는 다음의 4영역으로 나누어서 논의되고 있다.

- 1) 국경검문 철폐를 통한 비용 절감,
- 2) 정부와 공기업의 수주시장 개방에 의한 비용절감(예를 들어 정부공사를 전유럽적 인 경쟁에 불임으로써 생기는 비용절감),
- 3) 금융서비스와 자본시장 개방에 의한 효과,
- 4) 시장개방과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체치니 보고서>는 이로부터 생겨나는 중기적, 거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은 지표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통합에 의한 추가적 비용절감 효과에 의해 93년-99년사이에 유럽공동체는 4.5%의 경제 성장을 — 경기부양 정책 등이 수반되면 성장을은 7.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을 기할 수 있고, 더우기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4영역의 ‘효과’를 통해 기대되는 유럽공동체 전체와 독·불·이·영 각국의 국민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의 시뮬레이션은 아래 표와 같이 예측되고 있다.

결국 시장통합은 중·장기적 전망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미·일자본파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의 침해와 시장통합의 역기능적 ‘효과’들 및 시장통합에 따르는 소요 비용 등을 함께 감안한다면, 이러한 전망이 액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독일통일, ‘현존’사회주의의 붕괴와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 과정은 89년-90년의 예기치 못한 세계사적 격변을 맞이하면

〈표 1〉 경제정책적 조치들을 감안했을 경우 시장통합의 중기적, 거시적인 경제적 효과(EC 12개국)

Art der Wirtschaftspolitik	BIP in %	Verbrau- cherpreise in %	Arbeits- plätze (in Mio.)	öffentl Haushalte*
ohne Begleitmaßnahmen mit Begleitmaßnahmen	4.5	-6.1	1.8	2.2
-maximale Konjunkturbelebung	7.5	-4.3	5.7	0
-Konjunkturbelebung handelsbilanzneutral	6.5	-4.9	4.4	0.7
-Konjunkturbelebung (mittlerer Pfad)	7.0	-4.5	5.0	0.4

*) in % des BIP

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독일의 통합과 소련·동구권 사회주의국가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서’유럽공동체의 생성과 연관된 상황근거 자체가 소멸되고 전후 유럽을 지탱해 온 국제체계 자체가 붕괴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70년대에 ‘북방’으로, 그리고 80년대에는 ‘남방’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온 유럽공동체는 90년대에 이르러 ‘동방’으로 그 외연을 넓혀나갈 것이다.

먼저 독일문제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입장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의장인 프랑스 출신의 샤끄 드로가 90년 1월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독은 특수사례(Sonderfall)이다. 이미 본인이 선언했고 그리고 오늘 다시 명확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처럼, 만일 동독이 원한다면 공동체 내에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다.” 드로의 ‘특수사례’ 테제는 이미 반복되어 확인되면서 유럽공동체의 공식견해가 되었다. 그런데이 테제는 일정하게나마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동독이 이미 57년의 로마조약 당시부터 구서독의 주장에 따라 조약의 부속문서(Protokoll)에 특수한 지위를 명시받고 있었고, 또한 이에 따라 구동서독 간의 소위 무관세 ‘내독무역’에 의해 구서독으로 수출된 구동독 상품이 유럽공동체 국가들로 ‘재수출’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어온 사실에 비추어 어떤 의미에서 구동독은 이미 유럽공동체의 ‘비밀회원국’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독특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통합과정은 사실 ‘이중적 통합’ 과정이었다. 즉 구동독의 구서독 ‘기본조약’에 의거한 ‘가입’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구동독의 유럽공동체로의 ‘가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국내정치적으로 구동독이 구서독에 흡수통합되는 한 공동체차원에서 구동독이 가입하는 것은 구동독의 구서독 ‘가입’의 부수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양독의 통합과정에서 이른바 기왕의 ‘경제주의적’ 입장—예를 들어 영국의 당시 수상 대처와 구서독의 연방은행의 입장—과 ‘통화주의적’ 입장 간에 통합 자체보다는 그것의 방식과 절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이견은 그러한 경제적 이유에서 보다 낡은 국제질서 붕괴과정을 통해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 콜수상의 ‘정치 우위’ 노선 내지 전통 권력정치적 ‘폭주’노선에 대응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더 부합된다고 하겠다. 한편 주변국 역시 양독통합은 사실 ‘악몽’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구서독이 유럽공동체에서 차지하는 해게모니적 지위를 감안한다면

〈표 2〉 시장통합이 국별, 영역별로 전체경제에 미칠 중기적 결과(백분율)

	EG(12)	D	F	I	UK
(a) Grenzkontrollen					
Reales BIP	0.37	0.57	0.34	0.24	0.21
Bruttoanlageinvestit	0.47	0.76	0.45	0.20	0.29
Beschäftigung	0.17	0.37	0.03	0.10	0.20
Verbraucherpreise	-1.02	-1.27	-1.09	-0.68	-1.21
(b) Beschaffungsmärkte					
Reales BIP	0.55	0.56	0.50	0.39	0.70
Bruttoanlageinvestit	0.88	1.52	0.48	0.31	0.97
Beschäftigung	0.28	0.27	0.26	0.20	0.32
Verbraucherpreise	-1.46	-2.15	-0.42	-0.45	-2.92
(c) Finanzdienste					
Reales BIP	1.46	0.96	1.77	3.01	0.84
Bruttoanlageinvestit	2.42	1.04	3.95	5.00	1.02
Beschäftigung	0.36	0.42	0.41	0.45	0.31
Verbraucherpreise	-1.38	-0.48	-0.86	-4.19	-0.74
(d) Angebotseffekte					
Reales BIP	2.14	2.10	2.45	1.82	2.15
Bruttoanlageinvestit	1.63	1.88	1.90	1.41	1.13
Beschäftigung	0.68	0.65	0.87	0.64	0.56
Verbraucherpreise	-2.29	-2.26	-2.53	-1.75	-2.56
Insgesamt					
(a)+(b)+(c)+(d)					
Reales BIP	4.52	4.20	5.05	5.46	4.00
Bruttoanlageinvestit	5.39	5.21	6.79	6.93	3.42
Beschäftigung	1.47	1.68	1.57	1.40	1.39
Verbraucherpreise	-6.16	-6.16	-4.89	-7.07	-7.43

이에 최후까지 반대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어떤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유럽의 '맹주'가 된 독일의 국제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키면서 유럽내 역관계를 새로이 규정지운 것은 분명하다.

이와같이 양독의 통합문제는 '특수사례' 태제를 통해 애매하게 처리될 수 있었지만, 유럽공동체의 동방으로의 양적 확장 문제는 사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었다. 이미 고르바초프의 '유럽일가론'에 의해 소·동구권에서의 유럽환상, 즉 복지와 미래의 상징으로서의 통합유럽에 대한 이념적 기초는 마련되어 있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상

호 경제원조 협의기구)(RGW)가 와해되고, 일체의 사회적 구심점이 해체되는 시점에서 동유럽에서는 유럽공동체에의 가입은 곧 미래를 보장받는 것으로, 혹은 ‘문명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 결과 유럽공동체로의 가입신청 쇄도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 수년 안에 유럽공동체의 회원이 될 전망이고, 노르웨이, 핀란드와 스위스가 국내적으로 가입 문제를 타진 중에 있으며, 터키, 싸이펀과 말타가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하고 있으며, 헝가리, 폴란드, 체코가 91년 말 부분 가입조약(Assoziierungsvertrag)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및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부분 가입협상을 대기하고 있으며, 발틱 3국은 즉각적인 부분가입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의 후신인 소비에트연방(GUS)은 소속국과 특히 그중 우크라이나가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임은 시간 문제이다. 그러나 가입협상이 역사적으로 5년 내지 10년이 걸렸다는 점,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리라는 점, 그리고 92년 시장통합이 완료된 이후인 93년에야 비로소 가입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입신청 흥수가 현 시기의 유럽시장 통합과정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들의 유럽공동체 수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서유럽 중심국가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유럽경제공간(Europäische Wirtschaftsraum:EWR)>의 창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진전에 미루어 보아,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유럽공동체는 2천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적어도 지리적으로 유럽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국가를 포함하는 경제공동체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것과 정치적 의미에서의 <유럽합중국> 이상의 실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날에는 시장통합과는 다른 차원에서 유럽의 정치·군사적 미래구조에 관한 발상들이 다각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기존의 군사동맹 체계를 대체할 ‘집단안보 체계’로서 <유럽안보 연맹>, 전유럽적 ‘국가’들을 포함하는 조직으로서 <유럽국가 연합(Konföderation von Staaten Europas: KSE)> 및 기존의 <유럽안보 협력회의(KSZE)>를 대체할 <유럽안보 협력기구(OSZE)> 등의 발상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적인 제안들이 설사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소·동구권과 서유럽 간의 엄청난 사회경제적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표 3>와 <표 4> 참조),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이전과는 달리

<표 3> 유럽경제에서 동·서유럽이 차지하는 지위

	Europa	WE ¹	OE ¹
Bevölkerung(Mio.)	834	425	409
BIP(in Mrd. US Dollar)	7941	5654	2287
Außenhandelsumsatz(in Mrd. US Dollar)	2973	2583	390

1) Die damalige DDR wurde im Interesse der Aktualität der Aussage Westeuropa zugeschlagen.

Anteile in Prozent

	Europa	Westeuropa	Osteuropa
Bevölkerung	100	51	49
BIP	100	71	29
Außenhandel (Umsatz)	100	87	13

—즉 민족국가 단위 혹은 블록 단위에서 여과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유럽화’되면서 갈등의 광역화를 초래할 위험성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그간의 유럽공동체의 발전사를 기본적으로 규정해 온 질적 ‘심화’와 양적 ‘확장’ 간의 긴장관계가 유럽공동체의 동방으로의 확장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특히 양적 ‘확장’이 가져올 ‘하향평준화’가 가져올 긴장관계가 문제된다. 이 점은 지난 30년 간의 유럽사를 받쳐온 국제체계의 성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갈라져 있었지만 안정되었던’ 과거와 ‘하나가 되었지만 불안정한’ 현재간의 모순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소·동구권의 ‘현존’ 사회주의 권력의 붕괴는, 그것과 결부된 각종의 유토피아적 환상과 ‘기대혁명’과는 달리, 사회의 안으로부터의 해체과정을 야기시켰으며, 이는 동시에 전유럽적 차원에서 갈등잠재력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는 현재로선 이러한 상황전개에 직면하여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갈등잠재력을 규제할, 어떠한 유효한 정책수단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

IV. 시장통합의 구조와 조건 – 독일을 중심으로 –

1. 국내적 차원

(1) 시장통합과 독일자본의 대응전략

현 단계 유럽통합 과정의 핵심프로젝트인 시장통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국가별, 지역별, 부문별, 업종별, 규모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이 상이하고—예를 들어, 현 독일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유주의적’인 데 비해 현 영국정부의 그것은 ‘초자유주의적’이다—, 각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며—예를 들어 85년에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농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스에서는 28.9%인 반면 독일에서 5.6%이다—, 업종에 따라서도 가령 독일이 자동차, 화학, 기계, 전자 등에서 유럽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별로 주력업종이 판이하며, 나아가 시장통합이 가져올것으로 예측되는 ‘효과’ 면에 있어서도 거대 다국적기업과 현재 유럽의 전 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같

〈표 4〉 일인당 '국내 총생산액'에 따른 유럽내 사회경제적 격차(1988년)
 <독일의 경우, 구동독을 포함>

1. Gruppe	Länder mit höchstem Einkommen (über 20,000 US Dollar pro Kopf)	
	Schweiz	26,400
	Norwegen	22,500
	Schweden	22,400
	Dänmark	21,600
	Finnland	21,600
2. Gruppe	Länder mit hohem Einkommen (15-20,000 US Dollar pro Kopf)	
	Deutschland*	17,400
	Frankreich	16,100
	Österreich	15,900
	Niederlande	15,200
3. Gruppe	Länder mit mittlerem Einkommen (10-15,000 US Dollar pro Kopf)	
	Belgien	14,900
	Italien	14,500
	Großbritannien	14,300
4. Gruppe	Länder mit niedrigem Einkommen (5-10,000 US Dollar pro Kopf)	
	Spanien	8,700
	Irland	7,800
	CSFR	7,600
	Ungarn	6,500
	Jugoslawien	6,500
	Bulgarien	5,600
	UdSSR	5,600
	Polen	5,500
	Griechenland	5,300
5. Gruppe	Länder mit extrem niedrigem Einkommen (unter 5.000 US Dollar pro Kopf)	
	Portugal	4,200
	Rumänien	4,100
	Türkei	1,400
	Zypern	1,300
	Albanien	850
	Malta	570

* Einschließlich ehemalige DDR

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사업장별로도 그 효과가 전혀 다를 것이다. 이처럼 분석의 기준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지금부터는 시장통합에 대한 독일자본의 대응전략과 이해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90년도 독일경제는, 관례에 따라 매년말에 행하는 독일의 유수 경제관련 연구소들의 경기전망과는 달리, 8년째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른바 '5현자'로 불리우는 경제학 교수들로 구성된 <경제전문가 협의회(Sachverständigenrat)>와, <독일노조 총동맹> 부설 <경제·사회과학 연구소(WSI)> 및 관련 <독일경제 연구소(DIW)> 등을 망라한 유관 연구소들의 전망이 3.0-3.5%에 불과했던 반면, 실질성장율은 4.6%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에서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나머지 서유럽 국가와 일본에서 성장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해적인 현상에 속한다. 이러한 성장은 구동독경제가 88, 89년 산업분야에서 각각 +3.0%, +2.2%의 증가를 보였던 반면, 90년에는 -28.0%, 그 가운데 양독의 흡수통합 직전과 직후인 90년 4/4분기에 -51%라는 실질적인 경제 붕괴를 감안한 결과라고 할 때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총설비 투자액은 지난 10년이래 최고수준인 8.2%를 기록했으며, 수출 역시 10년이래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5>참조) 그런데 독일경제의 이러한 지위는 사실 시장통합 과정에 대한 독일정부와 대자본의 전략적 입장을 결정하는 규정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에 대한 독일 대자본의 대응은 사실 국내적 차원에서의 자신들의 새로운 전략과 깊이 맞물려 있다. 이 전략은 '탈규제'와 '유연화' 개념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화' 개념은 현재 독일자본의 일종의 '전략적 행동지침'이다. 이 지침은 1) 공장시간과 노동시간의 분리 — 예를 들어 철야교대제 근무등을 통한 분리 — 를 통해 고정불변자본의 경제화를 실현하고, 기계 가동시간과 노동시간을 분리시킴으로써 — 예를 들어 휴식시간과 작업교대 시간에도 기계를 계속 가동시킴으로써 — 자본의 투하자본의 전체 비용구조 중 고정비용 부분을 기계 등으로 구성되는 고정자본의 '시간집약적' 극대 활용으로 감소시키는 것, 2) 인원배치의 유연화와 인원감축 및 예를 들어 일용직의 증대에 의한 '비정상적 노동관계'의 확대 등을 통해 인원수준의 '유연화', 즉 시장상황에 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저 수준에서 유지하는 인원 부담의 '유연화' 내지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를 이루하며, 또 이를 통해 인건비의 경제화 역시 이루어한다는 것 등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장과 단체협약 차원의 '유연화' 전략은 국가적, 법률적 차원의 '탈규제'와 상호보완 관계를 이룬다. 이 '탈규제' 전략은 한마디로 기업활동과 자본의 가치증식을 방해하는 제반 '불필요한' 법률적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자율성에 따라 경제가 기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91년 5월 이른바 <탈규제위원회(Deregulierungskommission)>의 최종보고서가 독일연방정부 경제성에 제출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탈규제'의 규모가 단순히 상품시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노동시장 까지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89년 뮌헨의 <경제연구소(Ifo)>가 독일 <상공회의소(DIH)>의 위촉을 받아 15,000 개

〈표 5〉 독일의 거시경제적 기본지표(1980-1989)(전년대비, 1980년 가격기준)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v	1989v	1990v
Bruttosozialprodukt	1.5	0.0	-1.0	1.9	3.3	1.9	2.3	1.6	3.7	3.9	4.6
Privater Konsum	1.2	-0.5	-1.3	1.7	1.5	1.4	3.4	3.3	2.7	1.7	4.4
Staatlicher Konsum	2.6	1.8	-0.8	0.2	2.4	2.1	2.6	1.6	2.3	-0.9	2.9
Bruttoanlageinvestitionen	2.8	-4.8	-5.3	3.2	0.8	0.1	3.3	2.2	5.1	7.1	8.2
Ausrüstungsinvestitionen	2.6	-4.3	-6.7	5.6	0.5	9.4	4.1	5.6	7.5	9.7	12.1
Bauten	2.9	-5.1	-4.3	1.7	1.6	-5.6	2.7	-0.3	3.3	5.1	5.0
Ausfuhr(Waren+Dienstleistungen)*	5.3	8.2	3.2	-0.05	9.0	6.8	0.0	0.9	5.7	11.5	9.5
Einfuhr(Waren+Dienstleistungen)*	3.7	-1.2	-0.1	0.6	5.3	3.7	3.5	4.8	6.0	8.8	10.9

v= Vorläufige Ergebnisse des Statistischen Bundesamts.

* = Lieferungen in die die ehemalige DDR werden als Exporte der Bundesrepublik erfasst. Dies gilt auch für Lieferungen aus der ehemaligen DDR. Dadurch werden die Warenexporte bzw. die Warenimporte Westdeutschlands 1990 gegenüber dem Ausland überzeichnet.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5%의 기업은 시장통합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고, 58%는 그것이 자신들의 경쟁력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17%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수출지향적인’ 업종일 수록 시장통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나는 것이 분석결과로서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시장통합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화 경향에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온 다국적 대기업은 새로운 적응 압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우선 정보 부족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시장통합에 걸맞는 새로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투자에서 뒤처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첫째, 시장통합의 영향 분석과 경영 전략의 입안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대응 자체와 둘째, 자본결핍과 경영전략 변화를 위한 조직적 전제의 불충분성” 이 그것이다. 이와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시장통합에 대한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시장통합의 ‘효과’ 역시 업종별 시장통합 연관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종에서는 식품산업, 철강·건축, 기계제작, 미시전자, 사무용품·컴퓨터기기, 전자통신기기, 자동차, 약품·의료기구가, 그리고 서비스업종에서는 금융서비스—은행업과 특히 보험업—, 기업서비스—경영상담, 광고업—, 운수업—특히 항공업—, 통신업—가령 전화—이 시장통합에 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개방과 함께 첨예화될 경쟁으로 인해 폐쇄될 사업장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표 6〉 참조), 이 경쟁에서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업종과 기업일수록 ‘탈락자’가 될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표 6〉 시장통합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규모' 기업의 사업장폐쇄의 수(EC 12개국)

	F	D	I	GB	Rest EG	in %d. Unternehmen
Pharmprodukte	-10	-10	-10	-10	- 5	-11.5
Werkzeugmaschinen	-15	+39	-10	-12	-20	- 2.8
Büromaschinen	+ 1	+ 1	0	2	- 3	+ 1.5
Elek. Haushaltsgeräte	- 9	-14	-13	-14	- 8	-41.1
Automobile	- 1	- 3	- 1	- 1	- 1	-50.0
Schuhe	-57	-40	-36	-46	-29	-28.2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통합에 대한 독일기업의 대응 전략 내지 경영 전략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경영 전략은 변화된 기업환경에 대한 기업의 치열한 적응과정이기도 하다. 1) 경영합리화와 새로운 판매 및 마아케팅 전략의 개발, 2) 기술 및 생산과정의 혁신, 3) 유럽내 저임금 지역으로의 생산지 이전, 4) 기업간 협력강화와 나아가 기업합병과 통폐합이 그것이다. 결국 최소한 독일에 관한 한, 92년 시장통합에 대한 전략 기조는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에 대한 신기술 도입과 '탄력화' 전략을 통해 노조를 '길들이거나' '합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규제'의 실현을 통해 제반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해 나가려는 경향의 연속선 상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독일자본 측의 '세계시장 지향적' 축적 전략이 시장통합 과정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사실은 시장통합 과정이 수요와 분배 측면보다는 '공급사이드 경제학'에 의해 암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자본의 집중 및 집적을 수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시장통합과 <독일 노동조합 총동맹(DGB)>의 대응전략

유럽통합 과정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 문제는 우선적으로 독일자본주의의 일련의 내적인 구조변화 과정과 이로부터 생성되는 노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실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임금생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구서독의 경우 1950년 69.5%에서 1985년 87.1%로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노동에서 임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암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둘째, 같은 시기 임금생활자 가운데 산업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 70.9%에서 1985년 45.2%로 감소한 반면, 사무직과 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 23%에서 1985년 44%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임금생활자내의 다양한 직업범주들 간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무직과 관료군

의 노조 조직율은 1985년의 경우 16.3%에 불과하다. 이러한 독일자본주의의 사회 및 고용구조 상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이른바 ‘내포적 확대재생산’ 내지 과학기술 상의 진보가 새로운 기술, 생산 및 작업방식의 도입을 촉진시킴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덧붙여 80년 이후의 일련의 ‘탈규제’ 조치로 인해 상시고용에 대비되는 ‘비정상적 고용관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실 역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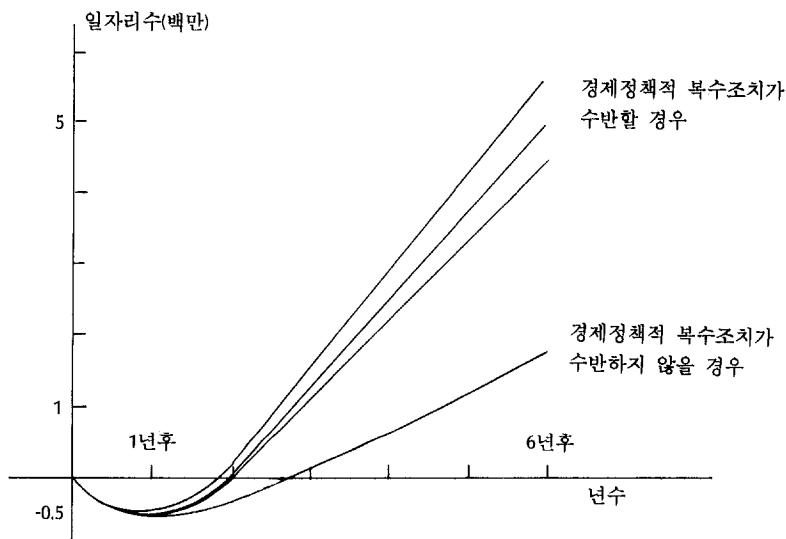
항상적인 실업에 대한 위협, 노동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파편화’, ‘주변화’, ‘개인주의화’ 현상 및 나아가 이른바 ‘포드주의적 소비주의’의 관철로 인한 새로운 노동자군 — 특히 노동자 2세세대 — 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노조활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사회적 결과 중의 하나로서, 노동자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이른바 ‘고용구조 변동을 소거한 임금비(strukturbereinigte Lohnquote)’가 85년에는 60년대 이래 최저인 62.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5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제7주기’라 일컬어지는 80년 이후의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분배관계가 열악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또한 가격이 일정하다고 할 때 실질 이윤과 실질 임금과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83년부터 88년까지 총이윤의 증가율이 구서독의 경우 7.6%에 달한 반면, 총임금과 급료의 그것은 2.9%에 불과하다.¹¹ 이러한 사실은 이른바 장기 악성 실업자군과 소위 ‘신빈곤층’의 형성 및 소득격차의 확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²

이러한 배경과 연관지워 볼 때 또한 90년의 독일통합 역시 노조에게 결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해 진다. 왜냐하면 한 국가 내에 엄청난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구서독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현저히 위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자들 내의 ‘파편화’ 및 이질화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동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추가적인 국가재정 부담이 결국 세금인상과 ‘인플레’를 통해 보전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는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92년 시장통합과 관련하여, 그것이 기존의 노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시장통합이 기업 측에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정한 양의 성장 및 자본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일정한 ‘효과’가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공통의 과제이자 최대의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실업문제의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시장통합의 ‘긍정적’ 결과 가운데 하나로 체치니는 그것이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11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R.Kowalski, “Kapitalakkumulation und Regulierungskrise - Methodische Probleme ihrer Analyse”, *IPW-Berichte*, 3/90, P. 19 참조.

12 80년대 이후 독일에서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과정에 대한 경험적 조사와 그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R. Welzmüller, “Differenzierung und Polarisierung. Einkommensentwicklung in den 80er Jahren”, *Blätter*, 12/1990 참조.

〈그림 2〉 시장통합과 고용창출전망¹³⁾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점은 〈그림 2〉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¹³⁾

체치니에 의하면, 시장통합의 첫 해에는 예를 들어 시장통합으로 인한 통관절차의 소멸로 말미암아 불필요해진 세관원 등이 해고됨으로써 약 50만에 달하는 일시적인 실업이 예상되지만, 그 다음 해에 이것은 곧 보전되고, 나아가 시장통합 6년째 되는 해에는 약 180만의 고용 ‘효과’가 예견된다고 한다. 더우기 거기에 경제정책적 부수조치가 수반된다면, 그 ‘효과’는 약 440만에서 570만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독일의 경우에는 약 43만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¹⁴⁾ 따라서 예상대로라면 아래 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표 7〉 시장통합과 고용효과¹⁵⁾

	1989	시장통합6년차
독일(서독)의 실업율*(등록된 실업자수)**	7.9 (2032)	- 1.7 (- 438)
유럽공동체의 실업율 (등록된 실업자수)*	8.9 (13437)	- 1.5 (- 1866)

*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 단위 1000

13) EG-Kommission, *Europäische Wirtschaft*, Nr. 35, Luxemburg 1988 참조.

14) A. Herrman, W. Ochel and M. Wegner, *Bundesrepublik und Binnenmarkt '92. Perspektiven für Wirtschaft und Wirtschaftspolitik*, Berlin/Munchen 1990, P. 130 참조.

15)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1991. Für das Ausland*, Wiesbaden 1991, P. 44에 그려
거해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적 기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에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세계시장의 조건이 악화되고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 실업문제 해결이 시장통합에 의한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 정책순위의 우위에 놓인다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다. 때문에 실업문제는 “시장통합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¹⁶ 더우기 “유럽에서의 완전고용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유럽공동체 기구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문제이다.”¹⁷ 이런 이유에서 노조의 유럽시장 통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한 근거가 생겨난다.

유럽시장 통합은 단순히 경제영역을 넘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생활방식 그리고 ‘노동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 내의 각 지역별로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와 사회보장은 극히 차별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장통합이 완성될 경우, 이러한 ‘노동관계’가 하향적으로 평준화되는 데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전유럽적 차원에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노동운동의 긴박한 과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는, 경제적 통합은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통합, 즉 ‘사회연맹(Sozialunion)’의 형성과 동시에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는 요구를 제출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신보수주의의 공세와 관련하여 유럽 각국의 시장통합 개념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분리 내지 ‘경제공간과 사회공간의 분리’에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노조측의 핵심적 대응전략은 양자의 ‘통일적 형성’을 추구하는 데에서 찾아 질 수 있다.¹⁸ 그리하여 독일노조의 기본적인 대응전략은 시장통합과 병행하는 이른바 ‘유럽적 사회공간’의 구축,¹⁹ 다시 말해 시장통합에로의 ‘사회적 차원’의 삽입, 즉 통합과정에 노동정책적, 사회정책적 차원을 개입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노조 연맹>과 <독일노조 총동맹>의 전직 위원장 에른스트 브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업가의 정책은 경제발전으로부터 사회발전을 분리 시켜 시장통합을 도입함에 있어 보수-자유주의적 구조 정책(Ordnungspolitik)의 특징들을 전유럽적으로 실현하자는 것, 다시 말해 사회보장 체계와 국가별 노동자 권리들을 지속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탈규제와 탄력화가 핵심이다.”²⁰ 그러나 유럽공동체는 노조에게 “결코 단순히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하

16 F.Franzmeyer, “Gesamtwirtschaftliche und strukturelle Aspekte der Vollendung des europäischen Binnenmarktes”, Arbeitskreis Außenpolitik der SPD-Bundestagsfraktion (ed.), *Europäischer Binnenmarkt - Europäischer Sozialraum*, Bonn 1988, P.44.

17 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Memorandum '89*, Köln 1989, P. 333.

18 여기에 대해서는 K.P. Tudyka, “Wirtschafts- und Sozialraum Europa - Begriff, Programm und Politik”, Deppe/Weiner, *op. cit.*, P. 69 ff. 참조.

19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Gestaltung des Europäischen Sozialraum im Binnenmarkt: Europäisches Sozialprogramm des EGB vom 11. und 12. Februar 1988”: “Für ein soziales Europa, Beschluss des Geschäftsführenden Bundesvorstandes des DGB vom 7. Dezember 1987”, E.Breit (ed.), *Europäischer Binnenmarkt: Wirtschafts- oder Sozialraum?*, Bonn 1988, P. 135 ff. 참조.

20 E. Breit, “Gewerkschaftliche Kriterien für einen europäischen Sozialraum”, *Ibid.*, P. 58.

나의 사회공동체이며, 나아가 정치적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로 하여금 유럽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마찬가지의 힘으로 사회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고 있다.”²¹

이러한 개념의 연장에서 <독일노조 총동맹>의 연방 의장단은 이미 오래 전인 87년 12 월 “하나의 사회적 유럽을 위하여”라는 결의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결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유럽공동체 내 사회적 최저기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의 제시, 즉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 2) 기업들의 정상적인 노동관계를 저해하는 여러 노선에 반대하는, 전 공동체 차원의 새로운 노선의 입안.
- 3) 각국의 정부 및 지방정부와 기업들 간의 공급 및 수주계약 시 사회법과 단체협약의 준수 요구.
- 4)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불평등을 시정할 각별한 노력.
- 5) 노동자들의 공동체 역내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정책 상의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요구.
- 6) 외국인들의 정치적 기본권리의 확대.
- 7) 국민들의 건강상태의 개선과 나라와 계층 별로 상이한 보건상의 격차를 허물기 위한 시도들.²²

그런데 독일노조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조직형태와 안정된 노사관계 내지 이른바 ‘산업관계’로 말미암아,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경제가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해외모니터링 지위로 인해 사실상 유럽 노조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부터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독일노조는 예를 들어 불·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노조가 특정 정당의 노선에 맞추어 활동하는 이른바 ‘노선노조(Richtungsgewerkschaft)’가 아니라, 서로 상이한 노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전국조직 하에 산별노조 형태로 구성되는 ‘단일노조(Einheitsgewerkschaft)’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조직 상의 강점이 있다. 그리고 89년 현재 <독일노조 총동맹>의 조직율—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 부문을 제외한 ‘종속적 임금생활자’가 <총동맹> 산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약 2774만의 경제활동 인구 중 786만에 달하는 31.8%에 달하고 있는데,²³ 이는 국제적으로 볼 때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그러나 이 가운데 제조업 분야의 조직율은 약 40%에 달하

²¹ Ibid.

²² Ibid., P. 164 ff. 참조.

²³ 통계수치는 M.Kittner(ed.), *Gewerkschaftsjahrbuch 1991. Daten-Fakten-Analysen*, Köln 1991, P. 88 참조.

²⁴ 노조조직율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미국 18%(84년), 일본 29% (85년), 유럽 내에 서도 프랑스 14% (85년), 이태리 36% (85년), 영국 43% (84년), 오스트리아 51% (85년), 스웨덴 81% (85년) 등으로 현격히 차이가 난다. 독일노조는 유럽 내에서만 본다면 중하 정도의 조직율을

는 데, 이는 프랑스의 약 9%, 스페인의 15%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둘째, 독일에서는 예를 들어 ‘공동결정(Mitbestimmung)’ 등이 보여주다시피 ‘산업관계’의 절차가 법적, 제도적으로 고도로 규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노조를 통한 노동자의 ‘이해대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에서는 이른바 ‘코포라티즘적 노사협조주의’ 모델이 정착되어 있다.

셋째, 이미 본 것처럼 90/91년의 유럽공동체 내부의 경기발전은 이른바 ‘라틴-영국계 국가군’—불, 영, 이, 서—에서 경기둔화 내지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이췰 마르크 존(DM-Zone)’—독,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오히려 경기파열 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²⁶ 이 사실은 적어도 90년 말부터 91년 초까지 독일의 경기는 일정한 전진, 후퇴 운동에도 불구하고 70년대 후반 이후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넷째, 독일통합은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영역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독일노조에게 양적 자원의 증대를 안겨다 주었다. 예를 들어 독일 최대·최강의 산별노조인 <금속노련(IG Metall)>의 경우 90년에 약 270만에서 현재 350만으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공공·운수·교통노련(OTV)>의 경우 약 125만에서 약 200만으로 노조원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공동체 차원에서 독일노조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또한 독일노조가 동·서유럽 노조의 ‘다리’ 역할을 맡도록 만드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이른바 ‘자본의 유럽’이 초래할 ‘사회적 텁평’에 대항하여 ‘유럽적 사회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기존의 협소한 ‘민족국가적 사고모델’과 행동지평을 과감히 극복함으로써 ‘다국적인’ 전유럽적 사고와 행동을 개발해야 하며,²⁸ 특히 이 과정에서 독일노조가 ‘사회진보의 동력’²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출되고 있다.

갖고 있다. 상세한 것은 J. Visser, “Westeuropäische Gewerkschaften im Umbruch”,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1/89, P. 28 ff. 참조.

25 통계수치는 H.-P. Kremer, “Europäischer Binnenmarkt 1992 : Ziel oder Start für einen Sozialraum Europa?”, *Memo-Forum*, Nr.14, Bremen, Sep. 1989, P. 72 참조.

26 Ibid., P. 627 ff. 참조.

27 Ibid., P.168 ff. 참조.

28 특히 O.Jacobi, “Pionierrolle der deutschen Gewerkschaften? Zur Gewerkschaftspolitik im Binnenmarkt '92”, Deppe/Weiner (eds.), *op. cit.*, P. 93 ff. 참조.

29 Kremer, *Europäische Binnenmarkt ... op. cit.*, P.72.

2. 유럽적 차원

(1) 통독, 독일해제모니 그리고 '신세계 질서'

아래의 <표 8>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미 88년 세계무역에 있어서 서독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치인 11.6%를 기록하여 뒤를 이은 미국 10.9%, 일본 9.4%을 앞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1인당 '총국내생산량(BIP)'에 있어서도 미국 14,019 달라, 일본 11,838 달라 그리고 서유럽에서 서독 다음인 프랑스가 13,864달라인데 비해 서독의 경우 그들은 15,122달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³⁰ 그리고 '총 국내생산량'에서 상품수

<표 8> 세계무역에서의 역관계 지표(1988)³¹

	Warenexport 1988 ¹ (Mrd. US-Dollar)	Anteil v. H.	Export- v. H.	Warenexport BIP ³ v. h.
Welt davon:	2129.1	100.0	.	.
Kapitalistische Industrieländer ⁴	1982.2	70.0	+38	17.8
darunter:				
USE	309.6	10.9	+12	7.3
Japan	264.9	9.4	+47	13.3
Westeuropa (BRD)	1230.3	43.5	+39	25.8
(Frankreich)	327.4	11.6	+41	29.3
(Großbritannien)	167.8	5.9	+27	18.2
(Italien)	145.5	5.1	+31	20.3
Entwicklungsländer ⁵	579.3	20.5	+44	20.0
darunter in:				
Afrika ¹	55.3	2.0	- 6	25.9 ⁶
Amerika	110.1	3.9	+36	15.8 ⁷
Asien	398.5	14.1	+135	11.2
RGW-Länder ² darunter:	216.1	7.6	.	7.9
UdSSR	110.6	3.9	.	19.9
ubrigie RGW-Länder	105.5	3.7	.	7.7
China	51.5	1.8	.	.

1 In jeweiligen Preisen. - 2 In vergleichbaren Preisen. - 3 Bruttoinlandsprodukt. - 4 Kapitalistische Industrieländer. - 5 Entwicklungsländer. - 6Nach Angaben für 30 Staaten. - 7Nach Angaben für 20 Staaten. - 8Nach Angaben für 11 Staaten (außer Staaten im Nahen Osten)

30 E. Lüdemann, "Weltwirtschaftliche Strukturen im Umbruch", IPW-Berichte, 10/91, P. 7 ckawh.

31 IPW-Bericht, 10/91, P.7.

출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서독은 미국 7.3%, 일본 13.3%에 비해 월등히 많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구서독의 경제가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세계시장 지향적이며, 수출의존형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현재의 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90년대에도 이러한 추세는 경향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³² 독일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독일자본과 독일경제가 유럽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의 <표 9>가 보여주다시피, 공동체내에서 독일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표 9>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대외무역 (1958년, 1986년)³³

	Export-abhängigkeit ¹⁾ (in %)		Verflechtung Handel ²⁾ (in %)		mit der EG: Sozialprod. ³⁾ (in %)		Gewicht in EG ⁴⁾ (in %)	Handels- bilanz ⁵⁾ (Mrd.ECU)
	1958	1986	1958	1986	1958	1986	1986	1986
BR Deutschl.	16.0	27.2	35.8	50.8	5.9	13.8	30.7	+53.1
Frankreich	8.9	16.5	28.6	57.8	2.8	9.5	15.0	- 9.2
Italian	8.5	16.2	33.1	53.5	2.9	8.7	12.3	- 2.9
Niederlande	33.9	48.0	57.1	75.7	21.9	36.3	10.6	+ 4.6
Belgien/Lux.	27.9	58.6	53.6	72.9	17.0	42.8	8.7	- 0.2
Großbritannien	14.3	19.4	20.3	47.9	3.2	9.3	13.3	- 19.9
Irland	22.3	51.4	85.1	71.9	21.4	37.0	1.6	+ 1.0
Danmark	25.9	26.3	58.2	46.8	15.8	12.3	2.7	- 1.5
Griechenland	7.4	14.2	50.4	63.5	4.0	9.0	0.7	- 5.8
Spanien	-	11.6	-	60.9	-	7.1	3.3	- 6.3
Portugal	-	25.3	-	68.0	-	17.2	0.9	- 2.3
EG der Zwölf	14.3 ⁶⁾	22.9	35.3 ⁷⁾	57.2	5.4 ⁷⁾	13.1	100	+11.0

1) Anteil der Export am Bruttoinlandsprodukt des Landes

2) Anteil der Export in die EG an den Gesamtexporten des Landes

3) Anteil der Export in die EG am Bruttosozialprodukt des Landes

4) Anteil der Gesamtexporte des Landes an den Gesamtexporten der EG

5) Handelsbilanz=Differenz zwischen Exporten und Importen : überschuss (+) oder Defizit (-), ausgedrückt in ECU (1986: 1ECU=2,13 DM)

6) EG der 9(ohne Griechenland, Spanien, Portugal)

7) EG der 10 (ohne Spanien, Portugal)

32 90년대의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Ibid. 참조.

33 Eurostat(유럽통계국), *Statistische Grundzahlen der Gemeinschaft 1988*,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이다. 즉 독일경제가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7%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15.0% 보다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역내무역에서 생긴 거의 대부분의 흑자는 서독이 차지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부터 연역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표 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럽공동체 내에서 독일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압도적이다. 유럽공동체 100대 기업 가운데 약 $\frac{1}{3}$ 이상이 서독에 소재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산업에서 독일의 BASF, BAYER, Hoechst가 각각 1, 2, 3 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에서는 독일의 Siemens가 1위, 기계제작에서는 독일의 Mannesmann, MAN, Krupp, Thyssen Industrie 가 각각 1, 2, 3, 4위를, 자동차에서는 역시 독일의 Daimler-Benz, Volkswagen이 각각 1, 2 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독일은 세계 최대의 철강생산국이다. 그리고 금융자본에 있어서도 독일은 현저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즉, 20개 유럽 대은행 가운데 7개가 독일계이며 그중에는 비밀본계로는 세계 최대은행인 <도이취 방크>가 포함되어 있다.³⁴ 이로부터 독일이 시장통합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시장통합을 통한 ‘효과’와는 별도로, 동서독 통합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자. 89년 서독의 ‘사회총생산량’(BSP: 단위 기간 중 생산된 재

<표 10> 유럽공동체 100대 기업의 국별, 업종별 분류표(금융부문제외, 1987년)³⁵

Hauptsitzland	D	F	GB	B	I	NL	SP	IRL	DK	GR	P	L	Summe
Handel	10	4	5	-	-	1	1	-	-	-	-	-	21
Automobile	5	2	1	-	1	-	-	-	-	-	-	-	9
Chemie	4	2	1	1	1	-	-	-	-	-	-	-	9
Elektro	3	3	1	-	-	1	-	-	-	-	-	-	8
Mineralölverarb.	-	2	2	1	1	1	-	-	-	-	-	-	7
Versorgung	2	3	2	-	1	1	-	-	-	-	-	-	9
Post, Telekomm.	1	2	1	-	-	-	-	-	-	-	-	-	4
Nahrungsmittel	-	1	2	-	-	1	-	-	-	-	-	-	4
Bergbau, Rohst.	2	-	2	-	-	-	-	-	-	-	-	-	4
Eisenbahn	1	1	-	-	-	-	-	-	-	-	-	-	2
Luftverkehr	1	-	1	-	-	-	-	-	-	-	-	-	2
Mischkonzerne	5	1	4	-	1	-	1	-	-	-	-	-	12
sonstige	1	3	3	-	1	1	-	-	-	-	-	-	9
alle Branchen	35	24	25	2	6	6	2	-	-	-	-	-	100

34 *Handelsblatt* vom 10.8. 88., 1988, p. 7.

35 *Handelsblatt* vom 27.7. 88., 1988, P. 10.

화와 용역의 총액)은 1조 1960억 달러(인구 6200만, 1인당 19,290 달러)였다. 그런데 동독의 1인당 '사회총생산량'이 서독에 비해 최소 40%라고 가정한다면, 이 때 동독의 '사회총생산량'의 규모는 약 1270억 달러(인구 1650만, 1인당 7720 달러), 즉 서독 '사회총생산량'의 10.6%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50%라고 가정하면 약 13%가 되고, 1/3로 가정하면 약 9%가 된다—.³⁶ 그 결과 공동체 내에서 볼 때 '사회총생산량'에 있어 영국과의 격차는 당시 가격으로 34%(3960억달러에서 4960달러로), 프랑스와는 48%(2450억달러에서 3620억달러로)가 벌어지게 되는 반면, 일본과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그 격차가 좁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격차는 약 8%(1조 6220억달러에서 1조 4950억달러로)가 좁혀지게 된다.³⁷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세계경제와 유럽경제에서 독일이 겪게 되는 경제적 지위변동을 예를 들어 독일의 <경제연구소(DIW)>는 다음과 같이 추산하고 있다.

이 보고에 따른다면 1) 통독과 함께 독일경제가 세계 산업국가에서 차지하는 '사회총생산량'의 비율은 8.5%에서 9.4%로 상승하게 되며, 2) 독일의 수출총액에서 유럽공동체

〈표 11〉 구동독을 제외하고 포함했을 경우 서구산업국가의 "사회총생산량"에서 국가별, 지역별 비중(1989년, 백분율)³⁸

	구동독을 제외한 '총사회생산(BSP)'	구동독을 포함한 '총사회생산'	수출에서 구서 독의 비율
서독 내지 독일	8.5%	(9.4%) (서독 8.4%) (동독 1.1%)	
서독을 제외한 EC	25.8%		67.3%
EC 전체		34.3% (35.0%)	
기타 유럽의 산업국가	5.0%	(4.9%)	19.9%
	-----	-----	-----
미국	36.7%	(36.4%)	8.9%
캐나다	3.9%	(3.8%)	1.0%
일본	20.0%	(19.8%)	2.9%
	-----	-----	-----
총계	100%	60.7% (60.1%)	12.8%

36 자세한 것은 E.Lüdemann, "Das ökonomische Potential des 'neuen Deutschland'", Z., Nr.4, Dez. 1990

P. 37 참조.

37 Ibid., p. 40 참조.

38 DIW-Wochenbericht, 13/1991, p. 146.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달하게 되며, 3) 세계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은 39.3%에서 약간 증대된 39.9%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폭은, 비록 양적으로는 미미한 것이지만, 유럽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유리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산술적 ‘효과’가 계산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다음의 몇가지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이른바 ‘통일비용’ 논의가 보여준 것처럼, 전격통합에 따른 재정부담이 조세인상을 통해 해결되었을 때, 이는 인플레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아니라 이자율에도 상당한 압력을 가한 것임에 틀림없다. 독일 연방은행이 지난해 8월에 이자율을 1% 인상하여 7.5%로 정한 것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다시 가격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나아가 스위스 프랑과 함께 세계 최강의 통화 가운데 하나인 마르크화를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약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둘째, 현재 심각한 구조위기를 겪고 있는 구동독 지역의 경제가 성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간산업 시설의 낙후성 및 구동서독 지역 간의 과학·기술 상의 혁경한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막대한 설비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경제위기와 함께 첨예화된 구동독 지역의 실업 및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막대한 양의 공공재정 부담이 필요하다. 결국 통독과 함께 기대되는 일련의 궁정적 ‘효과’와 이를 통한 독일의 재정 및 무역정책적 행동공간의 확대는 구동독 지역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및 그것의 해결능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나아가 독일은 소련과 동유럽의 혼란 사회주의정권 붕괴에 의해 최대의 반사이득을 거두었고, 또한 이들 지역에 가장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³⁹ 유럽공동체의 동방 확대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점에서 이들 지역의 경제가 다시금 지불능력을 갖추고 안정화되는 것은 독일 자신의 이해에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예를 들어 한 보고서에 따르면, 91년 소련의 경우 ‘사회총생산량’은 -15%, 산업생산량은 -20% 그리고 수출은 -10%를 기록하고 있다.⁴⁰ 그러므로 이들 지역이 실제로 ‘밑빠진 독(Faßohne-Boden)’이 되어 그로 인해 “서구와 동구에서의 독일의 실질적 경제유착을 비교해 볼 때, 동구에서 얻는 것보다 서구에서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⁴¹는 부정적 전망 역시 배제할 수가 없다.

39 예를 들어 소련이 전 외채 1140억 마르크 가운데 독일은 약 600억 마르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의 1/5 수준을, 미국은 약 5억 달라를 차지하고 있다. R. Trampert, “Förderung bei Wolgograd”, *Konkret*, 10/91, p. 40 참조.

40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91년 7월 16일 자 기사 참조.

41 H.Bömer, “Zur wirtschaftlichen Stellung der Bundesrepublik und ihrer ökonomischen Rolle im Transformationsprozeß Osteuropas”, Z., Nr.8, Dez. 1991, p. 167.

그런데 소위 '신세계 질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문제 및 그와 연관된 '초강국' 독일에 대한 인접국들의 근거있는 우려는 단순히 위에서 본 경제수학적 맥락에서만 파악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낙관론과 회의론 사이의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의 갈래 중 어느 것이 설득력을 지닐지는 사실 정치적 관계를 함께 고려할 때에야 비로소 보다 분명하게 답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적 잠재력과 정치-군사적 행동 가능성 사이에는 반드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⁴² 더우기 다음과 같은 언급, 즉 "동구의 변혁은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증대 시켰다.… 명확히 감소된 군비잠재력을 가진 그 어떤 안보체제도 블록대결 이후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려 할 만하다"⁴³라는 사실을 감안 할 때, 변화된 조건 속에서 맷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런 점에서 2가지 사건, 즉 미국과 이라크 간의 걸프전쟁 및 그 뒤를 이은 유고 위기는 그것이 현단계 유럽통합 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시사적이다.

실제로 유럽의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자 '통일된' 독일은 미국과 자신 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뒤 처져있는 영국에 의한 전쟁수행에 하급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앵글로-색슨계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 및 이들 국가와 상이한 '독-불-소련 축'의 전쟁대응 방식은 경제적 통합단계에 조응하는 적합한 정치적 형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갖게 될 유럽공동체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불균형 발전이 독일정부와 보수 일각을 '갑갑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이해가 가고 도 남는다. 91년 2월 독일연방 방위성 장관인 스톨텐베르크(G. Stoltenberg)는 걸프전쟁에 접하여 행한, "유럽안보정책의 상황과 전망"이라는 연설에서 "이라크의 침략은 냉전 종식이 영구평화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유럽 안에서의 평화가 자동적으로 유럽을 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가만히 있는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듯이 권력정치 그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력과 군사수단의 책임있는 사용이 문제가 된다"⁴⁴라고 주장했다. 그의 개념은 결국 이른바 연방방위군의 '유엔틀 내에서의 나토지역 외부로의 파병허용론'으로 정착된다.

특히 독일우파의 이런 류의 '책임론'은 유고위기를 둘러싼 공동체 내의 미묘한 정세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좀 더 분명해 진다. '봄날의 화재위험'이라는 유고위기에 직면해 미국을 비롯한 불·영 등이 기존의 연방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주의화로의 개혁을 유도한다는 전략구도를 갖고 있었던 반면, 크로치아와 대단히 특수한 역사적 관계⁴⁵

42 여기에 대해서는 F.Deppe, "Der Verfall der US-amerikanischen Hegemonie", Z., Nr.4, Dez. 1990, p. 6 ff. 참조.

43 J.Bischoff, "Vom Wirtschaftsriesen zur europäischen hegemonialmacht?", Z., Nr.4, Dez. 1990, p. 54.

44 G. Stoltenberg, "Situation und Perspektiven europäischer Sicherheitspolitik", Februar 1991 (*Information zur Sicherheitspolitik*), hg. vom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 und Pressestab, Öffentlichkeitsarbeit)

45 41년 4월 유고를 침략한 나찌 독일은 현지의 파시스트 정당인 우스타샤당을 내세워 크로치아독립

를 갖고 있는 독일은 이른바 ‘민족자결권’을 명분으로 크로치아와 슬로베니아를 승인코자 했는데, 이러한 독일의 처신은 독일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주변국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영·불·서로서는 이러한 ‘민족자결권’을 내세운 승인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각각 북아일랜드, 코르시카, 바스켓(스페인과 프랑스의 북서 접경지대) 그리고 카탈로니아(스페인의 북동 산악지대) 등지에서 민족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이들 지역의 독립 요구를 강경한 탄압으로 맞서 왔기 때문이다.⁴⁶ 독일의 이러한 독자노선에 대해 기타 서유럽 국가들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절에 대한 향수”이며, 독일의 두드러진 반세르비아주의적 태도는 “유럽화된 독일이 아니라 오히려 게르만화된 유럽 프로젝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고의 분해는 독일의 “깊숙한 희망”과 결맞는 것이라고 비난했다.⁴⁷ 실제로 독일의 대유고정책은 독일의 패권적 야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점은 독일 기민당(CDU)의 서기장 뒤에(V. Rühe)가 “우리의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능력은 넓은 모델에 입각한 독일 외교정책의 자기제한을 허용치 않는다”⁴⁸고 말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 선상에서 소위 ‘책임있는 권력정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경제력에 결맞는 정치력을 구사하려는 독일 지배세력의 당연한 발상일지도 모른다.

유고위기에 직면하여 유럽공동체는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19일-20일 베를린에서 <유럽안보 및 협력회의(KSZE)>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긴급 상황시 협의·협력을 위한 메카니즘”을 창출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의하면, 위기상황 발생시 위 <협력회의> 회원국은 누구든지 이 메카니즘을 소집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재’에 해당되는 이러한 절차는, <협력회의>가 실질적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유고 사례에서 그려했던 것처럼 아직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음이 분명하다.⁴⁹ 아무튼 결국 크로아チ아의 승인으로 결말이 난 유고위기는 독일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다. “윤이 나빴던 유고정책을 통해 정치연합에서도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만 한다.”⁵⁰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분명 이전까지 독일의 국제정치를 규정해 온 조건들, 특히 57년의 <유럽경제 공동체>와 나토로의 서독의 통합을 가능하게 했던 아데나워정권 이후의 ‘서유럽지향(Westorientierung)’의 근거를 박탈해 버렸다. 다시 말해 독일의 외교정책

국을 수립하였다. 그렇게하여 수립된 파시스트 정권은 크로치아에서 유태인과 세르비아인을 유혈 탄압하였다.

46 유고위기에 대해서는 J.Reuter, "Konfliktlinien und Perspektiven", *Blätter*, 8/91, p.937 참조.

47 A. Heinrich, "Neue Deutsche Außenpolitik", *Blätter*, 12/92, p.1449-1450에서 제인용.

48 V.Rühe, "Die weltpolitische Verantwortung des geinten Deutschlands" (*Rede auf dem Außenpolitischen Kongreß der CDU am 15.5.1991 in Bonn*), *CDU-Dokumentation*, 17/1991, p. 5.

49 자세한 내용은 P.Becker, "Das Krisenmanagement von EG und KSZE", *Blätter*, 8/91, p. 943 ff. 참조.

50 H.-P. Schwarz, "Der Scherbenhaufen", *Die Welt*, 24.10.1991.

은 통독을 통한 완전한 ‘주권회복(?)’에 의해 이전 보다 훨씬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합 과정과 관련해 볼 때, 그러한 ‘자유’는 다른 한편으로 인접국과 초민족국가적 심금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단계 독일 외교정책의 목표는 “외교정책적 독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외교정책을 독일의 생각에 맞추는 ‘바로’ 거기에 있다. 독일의 외교정책은 유럽적 준거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독자적 행동공간과 가능성들을 없애버리거나 유럽적 연결망을 팽창시험에 내맡기지는 않을 것이다.”⁵¹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유럽공동체의 ‘동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독자본의 ‘서구 정향성’은 시장통합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⁵² 그리고 통독과 소·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생성된 ‘신세계 질서’라는 조건 하에 있는 새로운 유럽의 경제적, 권력정치적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이전의 동·서간의 체제대립구조는 단일 경제권 내의 중심·주변의 대립구조로 변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2) <유럽노조연맹(EGB)>의 시장통합에 대한 대응

92년의 시장통합 문제를 볼 때, 전유럽적 차원에서 관철되고 있는 서구자본주의 내에 서의 사회구조 변화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실로 유럽 노동운동의 ‘위기’와 ‘정체’를 강요하는 내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그러므로 노조의 시장통합에 대한 유럽적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7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에서의 주요한 사회구조상의 변화경향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⁴

첫째, <표 12>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부문별로 보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농업과 산업부문의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그와 반비례하여 이른바 3차산업, 즉 서비스업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전유럽적으로 70년대 말까지 사회적 노동이 압도적으로 임노동의 형태를 띠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인구 중 이른바 ‘피고용자’ 계층⁵⁵이 86년 현재 근 80.7%에

51 Heinrich, “Neue Deutsche Außenpolitik”, *op. cit.*, p. 1451.

52 여기에 대해서는 U.Meinhardt/K.-P. Weiner, “Sprengt die deutsche Einigung die Integration Westeuropas?”, *Blätter*, 8/91, P. 933 참조.

53 45년이후 서구 노동운동의 발전경향에 대한 개관으로서는 F. Deppe, “Arbeiterbewegung in Westeuropa 1945-1985: Von der Bewegung zur Stagnation?”, *Marxistische Studien(Jahrbuch des IMSF 8)*, 1985, P. 58 ff. 참조.

54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L. Winter, “Die Arbeiterklasse der EG - Entwicklungstendenzen”, A.Leisewitz/ K.Pickhaus (ed.), *Gewerkschaften, Klassentheorie und Subjektfrage*, Frankfurt/M. 1990, P. 93 ff.; L. Winter, *Klassen und soziale Schichten im Kapitalismus der Gegenwart*, Berlin(DDR) 1989 및 Th. Hagelstange, *Die Entwicklung von Klassenstrukturen in der EG und in Nordamerika*, Frankfurt/New York 1988.

〈표 12〉 12개 유럽공동체 회원국 부문별 민간종사자 현황(1971-1986)⁵⁵

Land	Landwirtschaft				Industrie				Dienstleistungen			
	1971		1986		1971		1986		1971		1986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B	162	4.4	103	2.9	1581	42.7	1058	29.3	1960	52.9	2447	67.8
DK	256	10.9	166	6.2	869	37.2	718	26.9	1213	51.9	1782	66.8
D	2144	8.2	1344	5.3	12833	48.9	10345	40.9	11248	42.9	13578	53.7
EL	1275	40.6	1026	28.5	832	26.5	1012	28.1	1036	32.9	1562	43.4
ES	3518	28.5	1742	16.1	4608	37.3	3466	32.1	4239	34.3	5607	51.8
F	2668	13.1	1536	7.3	8113	39.7	6567	31.3	9656	47.2	12862	61.3
IRL	273	26.1	168	15.8	323	30.9	301	28.3	451	43.2	593	55.8
I	3875	20.2	2242	10.9	7617	39.7	6823	33.1	7684	40.1	11550	56.0
L	13	9.0	7	4.3	64	44.5	54	32.9	67	46.5	104	63.4
NL	320	6.9	248	4.8	1743	37.8	1375	26.8	2549	55.3	3512	68.4
P	-	-	890	21.9	-	-	1386	34.1	-	-	1787	44.0
UK	736	3.0	619	2.6	10546	43.9	7529	31.1	12749	53.1	16091	66.4
EUR	11722 ¹	11.2 ²	10090 ¹	8.3 ²	44521 ¹	42.5 ¹	40634 ²	33.3 ²	48612 ¹	46.31	714742	58.5
USA	3503	4.4	3350	3.1	26024	32.9	30338	27.7	49593	62.7	75909	69.3
Japan	8250	15.9	4950	8.5	18450	36.0	20180	34.5	24620	48.1	33400	57.1

1 EG 10

2 EG 12

달하고 있다(표 13 참조). 이에 따라 공동체 국가 내부에서는 계급구조의 등질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노동자 내부의 계급·계층 구성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84년의 경우 프랑스 노동자들의 총수는 약 1510만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이른바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수는 54년 650만에서 84년 710만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전체 노동자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58%에서 48%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써비스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60만에서 790만으로 그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 역시 32%에서 51%로 증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농업 프롤레타리아트’는 110만 (10%)에서 30만 (1%)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서도 써비스부문의 종사자가 노동부문의 종사자를 능가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이른바 ‘핵심’의 이전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넷째,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차지하는 비율은 86년 현재 유럽공동체 12개국에

55 유럽공동체의 〈유럽통계국〉에서 말하는 ‘피고용자(Arbeitsnehmer)’ 개념은 노동자계급에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 사무직뿐만 아니라,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중간층 및 사회경제적 지위로 볼 때 ‘부르주아’에 포함될 수 있는 ‘관리직(leitende Angestellte)’까지도 포함하는, 형태상 임금 및 급료를 받고 생활하는 모든 사회계층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Winter, ibid., P.97 참조.

56 Eurostat, *Revue, Rassegna 1971-1980*, Luxemburg 1982, p. 121, 122; *Ibid. 1977-1986*, Luxemburg 1988, P. 109, 110.

〈표 13〉 12개 유럽공동체 회원국 민간 경제활동인구 중 “피고용자” 비율
(1971, 1977, 1980, 1986, 백분율)

Land	1971	1977	1980	1986	1986:1977
B	82.0	83.0	83.2	81.6	-1.2
DK	79.8	82.5	84.1	88.4	5.9
D	83.6	85.9	87.1	87.1	1.2
EL	42.3	47.6	49.7	49.3	1.7
ES	66.1	69.9	69.5	70.4	0.5
F	78.9	82.6	83.2	84.2	1.6
IRL	69.6	72.5	75.3	76.5	4.0
I	67.6	71.4	71.4	70.1	-1.3
L	81.0	85.0	86.5	88.7	3.7
NL	83.7	87.9	87.6	88.8	0.9
P	-	64.5	67.4	68.1	3.6
UK	92.1	92.2	91.9	89.1	-3.1
EUR12	-	80.7	81.3	80.7	-0.1
USA	89.8	90.7	90.6	90.8	0.1
Japan	66.6	70.6	71.7	74.8	4.2

서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여성 고용인의 수는 특히 불완전 고용형태인 임시직에서 남성고용인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급·계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70년대 후반이후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국제화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국제화는 유럽노조가 적극적으로 타개책을 찾지 않으면 안될 긴급한 사안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자본의 축적전략이 이전의 노동집약적 재생산 유형에서 이른바 과학기술혁명에 기반하는 ‘내포적’ 재생산 유형으로 변화하면서 생산 및 노동과정에 도입된 새로운 기술은 다양한 사회적 계급·계층 범주의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임금생활자의 사회적 차별화와 분화를 촉진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교육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이러한 과정에 순응한 노동자 및 사무직과, 그렇지 못한 사회층들이 단위 사업장 내에서도 ‘핵심’과 ‘주변’층으로 차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위에서 말한 새로운 노조의 제반 운동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유럽노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새로운 내용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노조운동의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하여 심각히 문제되는 것은, 80년대 중반이후 조합원 손실을 약간 만회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의 경우가 보여주다시피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럽노조의 조합원 감소 현상이다. 이러한 경향

에 대항하여 유럽노조는 서비스 업종의 조직율을 제고하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에 자신의 전략적 지침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적 역관계에서 자본의 공세에 대한 수세적 방어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서유럽 자본주의의 일반적 경향과 함께 시장통합의 ‘사회적 차원’과 관련시켜 보면, 특히 다음의 몇가지 문제는 유럽노조 일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 ‘생산지(Standort)’ 문제: 유럽공동체 국가 간의 임금수준 및 노동시간은 극히 차별적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시간당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이 32.67 도이취 마르크(DM)인 데 비해, 일본은 25.12 DM, 미국은 24.57 DM, 그리고 아일랜드는 17.70 DM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노동시간에 있어서도 독일이 1582 시간인 반면, 이태리는 1655시간이고, 일본은 2166시간에 달한다. 물론 인건비는 전체생산비 총액에서 단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가별, 나아가 심지어 일국내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현실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제로 해 생각해 본다면 인건비 역시 기업의 생산지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한〈유럽공동체 집행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중해 연안의 남부유럽이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산업 생산지로서 가장 유리하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업의 생산지 선택에 변경이 일어날 경우, 해당 지역과 국가의 경제생활은 그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 해당 업종의 문제: 인건비는 특히 노동집약적인 업종과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업종, 예를 들어 식품·일용품산업, 교통·운수업 그리고 건축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독일에 비해 임금이 30-50%에 불과한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운수업자가 시장통합으로 독일 일부구간의 화물수송을 전담하게 된다면, 이것이 독일 운수업 전체에 미칠 타격은 심대할 수 밖에 없다. 즉 독일의 운수업자는 폐업 내지 휴업을 하거나 역으로 다른 나라에 지사를 설치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 이는 해당업체의 노동자에게는 곧 실업을 의미한다.

3) 법적 규제의 문제: 시장통합으로 기업들이 생산지를 임의로 선택하게 될 때 당면하게 되는 난제 중의 하나는 이른바 ‘산업관계’를 규제할 회사법(Gesellschaftsrecht), 조세법 및 노동법적 규범에 관한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독일 국적의 모회사가 포르투칼에 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어느 나라의 법에 의거하여 단체교섭 협상을 행해야 하는가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 법규법의 협력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시도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유럽공동체 집행위〉는 88년 7월 15일 ‘유럽주식회사 규약(Statut für Europäische Aktiengesellschaften)’이라는 의정서를 유럽 차원에서의 회사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아울든 이러한 제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사와 자회사 간에는 특히 ‘고용주의 유동’과 ‘고급’ 노동력의 이동이 훨씬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결국 이들과 상

대적으로 단순한 노동과정에 종사하는 다수 노동자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더우기 위의 규약은 비록 ‘피고용자’의 ‘기업 수준에서의’ ‘공동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단체협상, 공장법적(일종의 근로기준법적 차원의), 그리고 노동계약 상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권리행사와 ‘공동결정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약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자 간의 구조적 불평등 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시장통합은 노조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사회문제와 지역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유럽차원에서의 공동대응과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럽노조 간에 이미 상당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73년에 결성되어 21개국의 35개 노동단체 및 4400만의 조합원을 망라하고 있는 <유럽노조 연맹(Europäischer Gewerkschaftsbund)>의 위상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유럽노조 연맹>은 88년 2월 “시장통합과 유럽적 사회공간의 형성”이라는 자신의 유럽차원에서의 사회강령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연맹>은 시장통합은 “경제적, 사회적 결속(Zusammenhalt)”을 목표로 하여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럽적 사회정책’을 위한 ‘2가지 경로’로서 ‘입법화’와 ‘단체협상’, 즉 ‘유럽적 사회입법’과 ‘유럽적 차원에서의 사회 대화(Sozialdialog) 및 협상’을 제시하고, 이는 업종 차원, 유럽 차원, 국가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이라는 4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연맹>은 ‘경제적, 사회적 결속’을 내에서의 시장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5가지 목표로서 1. 성장과 고용, 2. 새로운 기술영역에서의 연구와 개발촉진, 3.연대, 4. 고용인의 자유왕래와 사회보장, 5.민주적으로 통제된 시장통합—경제민주화—을 제시하고, 이를 공동체 차원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사회강령으로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시장통합에 대한 노조 측의 전략적 대응개념인 ‘시장통합의 사회적 차원’ 개념은 2가지 중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인력과 재화의 자유왕래, 경제민주화, 협상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공간창출과 관련하여, 공동체는 시장통합의 완성과 결합되어 있는 특정한 권리들을 자신의 사회적 토대(Socket) 속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독자적인 유럽차원의 사회입법은 연대파업, 동등한 대우, 해고보호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등의 고전적 기본권의 승인으로부터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적용 시 공동결정 등의, 전혀 새로운 종류의 규범들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초기교육, 직업훈련과 재교육 또는 양육휴가 등도 인정되어야 한다. 시장통합과 함께 일 국내의 사회보장법이 개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이론바 시장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덤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의 노동자권리들이 ‘유럽공동체 사회권리 장전(Gemeinschaftscharta der sozialen Rechte)’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럽주식회사 규약’에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노조 연맹>은 <유럽공동체 집행위>가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주식회사 규약’에서 제안한 3가지 모델 - 1) <감사협의회(Aufsichtsrat)>에

서의 공동결정(독일모델), 2) <감사협의회>와는 분리된 다른 기구에서의 노동자의 공동활동(벨기에 혹은 프랑스모델), 3) 단체협약에 기초한 노동자의 공동결정(스웨덴 혹은 이태리모델)- 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그로부터 더 나아가 <유럽적 공장평의회(Betriebsrat)>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연맹>은 노동자대표의 공동결정권의 범위를 기업의 자본유치와 기업의 투자전략, 기업 간의 협력, 가동중단, 인사계획에서 나아가 이사 선임과 해임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별로 극히 차별적인 사회 및 노동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 노조연맹>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규범적 접근(normaltiver Ansatz)’에 대해 기업과 자본 측은 이른바 ‘탈중심화 접근(Dezentralisierungsansatz)’을 내세우고 있다. 상이한 노동 및 사회관계는 본질적으로 자유경쟁에 맡김으로써만 최소화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경쟁에 대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규제는 반생산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양자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집행위>가 여러번 제시한 타협안이자 일종의 ‘중용책’이 곧 ‘조화론적 접근(Harmonisierungsansatz)’이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집행위> 의장 쟈끄 들틀로는 <집행위>의 85년 <백서>가 ‘사회적 차원’을 간과했다는 노조측의 비판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것의 폐허 위에 서있는 강력한 경제를 위해 본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아, 노조를 비롯한 ‘유럽좌파(Eurolinke)’가 신자유주의적, 혹은 신고전과 경제학에 기초한 자본의 ‘탈규제’ 공세에 밀려 이른바 시장통합의 ‘폐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연 ‘신국제주의’에 기반하는 ‘역규제(Re-Regulation)’ 와 ‘유럽공동체 체계(EG-System)’의 민주적 형성을 성취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는 유럽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역관계의 전개와 그 전개 방향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9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 프로젝트는 한 때 이른바 ‘유럽찬미(Euphoric)’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유럽 전체를 열광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현 시기에는 유럽의 정치·경제적 논의를 지배하였던 그러한 낙관론 일색에서 벗어나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대차대조를 계산하는 현실주의가 세를 얻고 있다. 특히 독일 통일과 소·동구권의 격변을 야기시킨 ‘통합 유럽’에 대한 대중적 기대와 흥분과는 달리, 그것이 이들 지역에 가져다 준 사회경제적 결과는 오히려 실망과 좌절에 가까운 것이었다. 유럽의 ‘중심’인 서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들 역내의 ‘저임금·저발전’ 지역의 존재는 거시적으로 볼 때 유럽공동체 통합과정의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유럽공동체가 곧 유럽이 아니다”라는 경고는 현재의 이러한 변화된 분위기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92년 말까지 완성시킬 예정인 시장통합은 전망컨대 현재의 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 시장통합은, 비록 <체치니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만큼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일정한 양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단점’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통합의 ‘효과’는 대단히 불평등하게 분배될 것인 바, 현재로서는 독일과 독일 국적의 기업이 이 과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공산이 가장 크다. 나아가 유럽통합은 그 과정에 내재적인 측면으로서 역사적이며 동시에 구조적인 모순·갈등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은 다음의 서로 얹혀 있는 축선을 따라 일종의 ‘반경향(Gegen-Tendenz)’으로서 국가, 지역, 업종 별로 극히 다차원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1. ‘민족국가’적 심급과 ‘초민족국가’적 심급 간의 관계: 한편으로는 기존의 민족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영역의 어떤 ‘주권’을 ‘초국가적’ 심급과 제도에게 이양할 것인가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민족국가 간’의 이해 차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절차와 제도가 과연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영역이 존재한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한 단위 민족국가의 ‘경제주권’ - 예를 들어 관세주권 - 의 이양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는데, 이는 단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자와 생산의 국제화에 조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와 관련해서 보면, 유럽 공동체의 중심국인 독·불·영 간의 전통적 갈등구조야말로 기능주의에서 가정해 온 것처럼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으로 ‘넘쳐 나는(spill-over)’ 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치와 경제의 관계: 정치와 경제의 불균형과 불일치는 지금까지 일국적 차원에서 는 국가 별로 대단히 상이한 모순 구조를 형성시켜 왔으며, 초국적 차원에서는 - 지금 까지의 유럽공동체 통합사가 보여주듯이 - 유럽의 정치적 통합시도들을 좌절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또한 그것은 현재의 경제통합 과정이 금세기 말로 예정된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진전되는 것을 가로 막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이며, 나아가 설사 정치적 통합이 부분적이나마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그 통합의 형태를 중심적으로 규정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85년 이후의 유럽 시장통합 과정은 지금까지 암도적으로 ‘경제의 논리’ 내지 ‘자본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이에 대해 노조와 좌파세력이 ‘사회적 논리(Soziallogik)’ 내지 ‘노동의 논리’로 대응해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속에서 정치가 앞으로 일국적 차원과 다국적 차원에서 계속 ‘친경제적으로’ 형성될 것인가, 아니면 ‘친사회적으로’ 역전될 것인가의 문제 역시 향후의 유럽통합 과정에서 관건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3. ‘중심’과 ‘주변’의 관계: 유럽공동체의 ‘동방’로의 확대는 기존 공동체내의 지역문제

를 ‘남북문제’의 형태로부터 나아가 ‘동서문제’로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아일랜드 등으로 구성되었던 유럽의 기존 ‘주변’이 향후에는 동구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유럽공동체의 확대과정이 결국 ‘주변’의 확대과정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 과정은 동시에 지금까지 유럽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확산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국가’들을 ‘중심’의 성장과정 속으로 통합해 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유럽적 수준에서의 분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유럽통합 과정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게 될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 간의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는 그 과정이 안고 있는 매우 긴박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4. 이러한 문제영역 외에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군사, 환경, 여성, 기술, 농업, 3세계 문제 역시 앞으로의 통합과정 속에서 중요한 문제들로 제기될 것이다.

결국 현 시기 유럽통합 과정의 핵심프로젝트인 시장통합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 통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문제영역들을 유럽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Altvater A.

1973 *Die Weltwährungskrise*, Frankfurt/M.

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1989 *Memorandum '89*, Köln.

Axt H.-J. and F. Deppe

1978 *Europaparlament und EG-Erweiterung. Krise oder Fortschritt der Integration?*, Köln.

Becker P.

1991 “Das Krisenmanagement von EG und KSZE”, *Blätter*, 8/91.

Bischoff J.

1990 “Vom Wirtschaftsriesen zur europäischen hegemonialmacht?”, Z., Nr.4, Dez.

Bömer H.

1991 “Zur wirtschaftlichen Stellung der Bundesrepublik und ihrer ökonomischen Rolle im Transformationsprozeß Osteuropas”, Z., Nr.8, Dez.

Brandstetter K.J.

1989 *Allianz des Misstrauens*, Köln.

Breit E.(ed.)

1988 *Europäischer Binnenmarkt: Wirtschafts- oder Sozialraum?*, Bonn, Brock L. and Jopp M. (eds.)

1986 *Sicherheitspolitische Zusammenarbeit und Kooperation der Rustungswirtschaft in Westeuropa*, Baden-Baden.

Deppe F.

1985 "Arbeiterbewegung in Westeuropa 1945-1985: Von der Bewegung zur Stagnation?", *Marxistische Studien*(Jahrbuch des IMSF 8).

1990 "Der Verfall der US-amerikanischen Hegemonie", Z., Nr.4, Dez.

1990 "Die westeuropäische Arbeiterbewegung und die EG", *Zeitschrift Marxistische Erneuerung*, Marz.

DIW-Wochenbericht, 13/1991, P. 146.

EG-Kommission

1988 *Europäische Wirtschaft*, Nr. 35, Luxemburg.

Eurostat

1982 *Revue, Rassegna 1971-1980*, Luxemburg.

1988 *Revue, Rassegna. 1977-1986*, Luxemburg.

1988 *Statistische Grundzahlen der Gemeinschaft 1988*,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Franzmeyer F.

1988 "Gesamtwirtschaftliche und strukturelle Aspekte der Vollendung des europäischen Binnenmarktes", Arbeitskreis Außenpolitik der SPD-Bundestagsfraktion (ed.), *Europäischer Binnenmarkt - Europäischer Sozialraum*, Bonn, Hagelstange Th.

1988 *Die Entwicklung von Klassenstrukturen in der EG Bund in Nordamerika*, Frankfurt and New York.

Handelsblatt vom 10.8. 88. 1988.

Handelsblatt vom 27.7. 88. 1988.

Heinrich A.

1992 "Neue Deutsche Außenpolitik", *Blätter*, 12/92.

Herrman A., W. Ochel and M. Wegner

1990 *Bundesrepublik und Binnenmarkt '92. Perspektiven für Wirtschaft und Wirtschaftspolitik*, Berlin/Munchen.

IPW-Berichte, 10/91.

Jacobi O.

1992 "Pionierrolle der deutschen Gewerkschaften? Zur Gewerkschaftspolitik im Binnenmarkt '92", Deppe/Weiner (eds.)

Kittner M.(ed.)

1991 *Gewerkschaftsjahrbuch 1991. Daten-Fakten-Analysen*, Köln.

Kowalski R.

- 1990 "Kapitalakkumulation und Regulierungs Krise - Methodische Probleme ihrer Analyse", *IPW-Berichte*, 3/90.

Kremer H. -P.

- 1989 "Europäischer Binnenmarkt 1992 : Ziel oder Start für einen Sozialraum Europa?", *Memo-Forum*, Nr.14. Bremen, Sep.

Lüdemann E.

- 1990 "Das ökonomische Potential des 'neuen Deutschland'", *DAZ.*, Nr.4, Dez.

- 1991 "Weltwirtschaftliche Strukturen im Umbruch", *IPW-Berichte*, 10/91, P. 7 ckawh.

Meinhardt U and K.-P. Weiner

- 1991 "Sprengt die deutsche Einigung die Integration Westeuropas?", *Blätter*, 8/91.

Paolo Cecchini

- 1988 *Europa '92 - Der Vorteile des Binnenmarktes*, Baden-Baden,

Reuter J.

- 1991 "Konfliktlinien und Perspektiven", *Blätter*, 8/91.

Rühe V.

- 1991 "Die weltpolitische Verantwortung des geeinten Deutschlands", *CDU-Dokumenttion*, 17/1991.

Sahm U.(ed.)

- 1951 *Der Schuman-Plan. Vertrag über die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für Kohle und Stahl (Textausgabe)*, Frankfurt/M. 1951.

Schwarz H -P

- 1991 "Der Scherbenhaufen", *Die Welt*, 24.10.

Statistisches Bundesamt

- 1991 *Statistisches Jahrbuch 1991. Für das Ausland*, Wiesbaden.

Statz A.

- 1975 "Zur Geschichte der westeuropäischen Integration bis zur Gründung der EWG", F. Deppe(ed.),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EWG)*, Reinbek bei Hamburg 1975.

Stoltenberg G.

- 1991 "Situation und Perspektiven europäischer Sicherheitspolitik", February (*Informationen zur Sicherheitspolitik*, hg. vom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 und Pressestab,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Trampert R.

- 1991 "Förderung bei Wolgograd", *Konkret*, 10/91.

Tudyka K.P.

- 1992 "Wirtschafts- und Sozialraum Europa - Begriff, Programm und Politik",

Deppe/ Weiner, (eds.)

Visser J.

1989 "Westeuropäische Gewerkschaften im Umbruch",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1/89.

Weiner K.P.

1988 "Integrationsschub 1991. Dimension des Projekts westeuropäischer BInnenmarkt",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5/88.

Welzmüller R.

1990 "Differenzierung und Polarisierung. Einkommensentwicklung in den 80er Jahren", *Blätter*, 12/1990.

Winter L.

1989 *Klassen und soziale Schichten im Kapitalismus der Gegenwart*, Berlin(DDR).

1990 "Die Arbeiterklasse der EG - Entwicklungstendenzen", A.Leisewitz/ K.Pickhaus (ed.), *Gewerkschaften, Klassentheorie und Subjektfrage*, Frankfurt/M.

Political Economy of EC Market Integration : the German Case of Capital-Labor Relationship

Se-Kyoон Kim

The unification of the European market planned to be in effect since 1993 seems to provide a turning point for the Europe to recover the status of the leading actor in the world economy. Based upon this prospect, the optimistic view anticipating rehabilitation of the European economy has prevailed. In the sphere of the political integration, the notion of the national state, which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French Revolution, has also been substituted by the new concept of the European continental state. The majority of the sceptics, who cannot but help face reality now, try to recover hegemony from the proponents of new conservatism. They begin to suggest that the vision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peace would be realized if the social partnership between labor and capital could be established.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Germany and the dissolution of the socialist regimes in the Russia and east european countries, we experienced the innumerable chaos and frustrations. And there has appeared the new problems of the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in the enlarged European periphery.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unforeseen social cleavages and structural contradiction of nowadays. For the smooth integration of the European region in peace, we should find out the ways of coordination

between the national state and the transnational state about the nature of the sovereignty, between political integ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ore and periphery.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